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사) 한국정당학회

목 차

I. 연구개요	1
II. 토론의제 총괄표	7
III. 분야별 토론의제 총괄표	9
IV. 분야별 토론의제	48
1. 정치/외교 분야	43
2. 경제 분야	140
3. 사회분야	189
V.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246

I

연구 개요

I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9대 대선이 탄핵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돌발적으로 진행된 선거였다면 이번 20대 대선은 다시금 5년을 주기로 한 선거로 복귀하여 각 정치세력의 일정애 따라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정당들은 후보자를 결정하고 주요 공약의 일부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역시 증대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과 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선 공간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중립적으로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 및 정책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당파적 잣대에 의해 자의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지식이 부족하여 공약의 현실성 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대선 TV토론회의 역할도 역시 커지고 있다. 대선 토론회는 1997년 15대 대선 때 처음 실시된 이후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왔다. 대선 TV토론회는 후보들의 자질, 능력, 인성을 검증하는 무대이다. 후보들은 자신의 국가비전, 정책, 정치적 신념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다른 후보의 약점을 드러내어 경쟁우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유권자들은 TV토론을 보면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후보자의 정책이나 도덕성에 관한 정보를 선거캠페인 과정이나 뉴스를 통해서 획득하지만, 복수의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조건 아래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직접 비교할 기회는 대선 TV토론회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대선의 경우 대선 TV토론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현재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부동층 유권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주력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고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TV토론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유권자들의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1월 28일~29일 서던포스트·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TV토론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6%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TV토론 시청 의향에 관한 질문에는 46.6%가 “꼭 보겠다”, 40.5%가 “가능하면 보겠다”고 응답하여 TV토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1월 26일~27일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이 “TV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 줄 것”이라고 답하였다. 비슷한 결과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후보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33%가 TV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였고, 지지후보가 없는 경우 55%가 TV토론 결과로 지지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연구 결과도 TV토론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가령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2017년 EAI 대선패널 조사>에서 지지후보 변경과 관련하여, 선거 전에 실시된 1차 조사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지후보 변경의 사유를 물어보았다. 후보자를 변경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24%가 TV토론회를 보고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자에게 실망하여' 지지후보를 변경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는 '지지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낮아서'라는 답변(21%)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V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권자의 후보 평가가 투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 질문 의제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2. 연구 내용

한국정당학회는 2012년 제18대 및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제 개발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의 경험을 쌓은 바 있다. 한국정당학회의 소속 연구자들은 한국의 정치, 외교, 통상과 안보 및 통일, 경제와 민생, 사회와 복지, 교육과 환경, 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전공자들이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의제 개발 용역 프로젝트는 각 분야의 최고연구진들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엄정한 자문을 거쳐 신중한 토의를 거쳐 진행되었고,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 1) 당대 현안에 대한 후보의 총체적인 평가, 2) 정책 중심성, 3)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한국 사회의 당대 현안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거시적인 철학, 비전, 태도와 아울러 각론 차원의 구체적 문제해결방안 및 대안 제시와 같이 후보

자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제 선정에 집중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은 대부분의 대선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당장의 사회 현안에 대한 세세한 정책 제안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 전체 운영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 및 시대정신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적인 입장과 세계관 그리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조 및 당대 현안에 대한 거시적 방향성 과 비전과 같이 보다 큰 추상적인 질문도 던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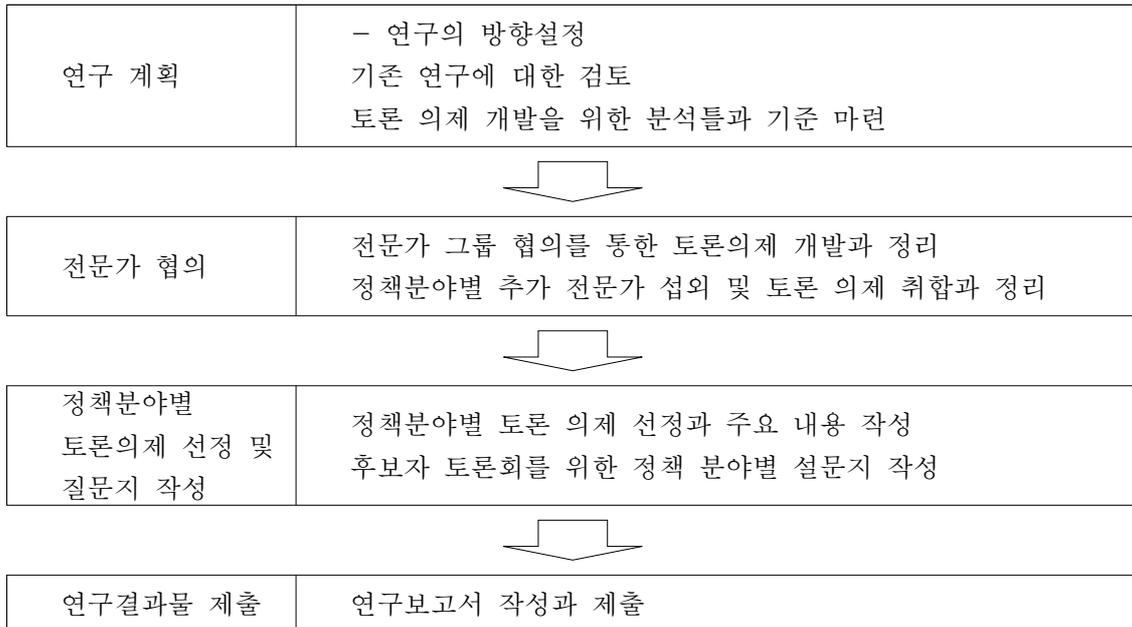
둘째, 정책중심의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가 중요하다.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고 대통령 후보의 비전과 정책적 입장에 대한 엄정하고도 전문적인 검증 및 정책 경쟁에 대한 목마름이 큰 실정이다. 대선을 50여일 남기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다수의 공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정책에 기반한 투표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함의가 있다. 따라서 남은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자들의 치열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정책에 기반해서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투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의제 선정이 필수적이다.

셋째, 한국 사회의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자 했다. 각 후보자들이 당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변화하는 내외부의 환경 및 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및 해결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함께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대해 한 공간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토론 의제는 후보자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안보, 경제, 민생, 복지, 사회, 교육, 과학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분야별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한국정당학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후보자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정책 분야별 질문지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는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총괄적으로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위 과정에서 조사결과의 적실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당학회는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균등한 인원의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이 편향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여성 등 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당학회 외에도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등의 전문 학회에서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는 전문가들을 섭외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더해 학계 외에 정부와 국회, 비영리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 또한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다.

전문가 협의 과정은 1차로 각 정책 분야의 토론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토론 의제는 토론의 전체적인 구성을 계획하는 데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각 정책 분야별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토론 의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통계 수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당 토론 의제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정당과 후보자별 입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토론의 논점을 정

리하였다. 토론 의제를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에 기초하여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예시를 기술하였다.

II

토론의제 총괄표

II 토론의제 총괄표

분야	분야별 주제
정치	정치 ○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 정치개혁 ○ 국정운영
	외교 ○ 안보 ○ 통일 ○ 외교/통상
경제	○ 경제개혁 ○ 경제성장 및 일자리 ○ 민생
사회	○ 복지&여성 ○ 환경&과학 ○ 교육&문화

III

분야별 토론의제 총괄표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1	시대정신과 미래비전
토론 의도	후보가 시대정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Q.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기존의 국내외적 질서는 강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시대에는 국가 지도자가 과거를 성찰하고 현 시대의 상황을 진단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후보가 보시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2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 자질 검증
토론 의도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
토론 질문	Q.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인성, 가치관, 리더십,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 2개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지도자 중에서 닳고 싶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토론 의도	후보자가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
토론 질문	Q.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 내의 갈등은 이념, 젠더, 세대, 계층, 노사, 지역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날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사회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의 표출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현재 사회갈등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세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사회갈등이 격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토론 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의지 검증
토론 질문	Q. '민주주의 후퇴'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합법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권력 견제를 약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선거를 통해 위임 받은 권력의 제한적 성격을 잊고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을 남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경우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가와 대통령 권력이 비대화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자제하지 않았고 평가르기를 통해 정치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빈번하게 들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5	공정과 정의
토론 의도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
토론 질문	Q. 공정과 정의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약속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약속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고,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1	국회개혁
토론 의도	대의기관인 국회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한국에서 국회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갈등과 대립만이 난무했으며, 그 가운데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또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2	선거정당개혁
토론 의도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그간 한국 선거제도는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 채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을 계속 재생산해왔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은 공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혁신을 게을리한단 비판을 현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선거 및 정당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3	검찰·법원개혁
토론 의도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그간 한국의 사법체계,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검찰의 경우 형사 절차상 너무 과도한 권한을 보유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취약해 공정한 사법처리에 기여하지 못한단 비판이 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검찰개혁이 단행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첨예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검찰 및 사법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4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토론 의도	지방자치 및 분권과 균형발전을 꾀하는 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그간 한국은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극심한 수도권과밀화 및 지방의 쇠퇴 및 소멸이란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지체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민 분권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5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토론 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구상 파악
토론 질문	Q.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이란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단 사회적 요청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그간 개헌을 전제하지 않은 운영상의 변화에서부터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방식까지 다양한 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1	대통령-국회 관계설정
토론 의도	대통령과 국회 간 적절한 관계설정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역대 대통령들은 여소야대 시 자신의 정책 아젠다들을 입법화 시키거나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여대야소 상황에선 다수 여당을 동원해 국회를 거수기화하고 자신의 아젠다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시 국회의 청문보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무위원들을 그냥 임명하곤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회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해 여당과의 건강한 거리, 야당과의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어떻게 이뤄내시겠습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2	국민소통 향상
토론 의도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민주화 이후 현재는 시사각각 집계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시사각각 반영되는 비판적인 여론과 함께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소통이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는 뜻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민소통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3	정부조직개편
토론 의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년 가까이 정부조직개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MZ세대의 부상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이 큰 시점이기도 합니다. 후보자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4	공공기관 개혁
토론 의도	공공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2021년 이른바 ‘LH 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에선 다시금 공공기관 개혁 의제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H 임직원의 부적절한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문제가 일종의 국가 차원의 시스템 고장으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문제가 LH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정치 분야	
세분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5	언론개혁
토론 의도	언론개혁의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이른바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정 보도 이슈가 급부상한 상태이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주요 미디어 관련 정책 의제로서 언론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 등 또한 중요한 언론개혁 관련 이슈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언론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1	한미동맹
토론 의도	<p>최근 한국과 미국 간 합동훈련의 규모 및 횟수 축소와 관련된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논쟁 중인 이슈 등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한 후보자들의 평가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방향 및 비전을 알아보고자 함.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진단과 함께 새로운 정부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의도.</p>
토론 질문	<p>Q.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축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에 한국이 일본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북핵문제를 둘러싸고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한미연합훈련 역시 규모나 횟수 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p> <p>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의 현 주소에 대해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2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 의도	<p>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군사 재무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여전히 진행 중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외부 안보위협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음. 또한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의존만 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들의 제시가 필요함.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자주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비전과 로드맵 제시를 의도.</p>
토론 질문	<p>Q. 201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 재무장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은 여전히 큼. 한편, 미중 간의 경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안보 의존은 한국의 전략적 행보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자주적으로 안보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를 위한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3	한국의 국방개혁
토론 의도	<p>최근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음. 국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기가 도래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음. 국내적으로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한국의 국방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빠르게 변해가는 국내외적 환경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역시 국방개혁2.0을 추진하며 제4차산업혁명시기와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국방개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목적 및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시를 의도.</p>
토론 질문	<p>Q.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제4차산업혁명시기가 도래하면서 5G로 대표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안보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국방구조와 무기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기체계에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등장하고, 가용한 군 인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력의 손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상황에 맞춘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방개혁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듣고자 합니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4	사이버 안보 이슈
토론 의도	<p>최근 들어 신형안보 이슈가 전통안보 이슈와 연계되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이버 안보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간헐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사이버 안보가 한국의 전통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안보에도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의 위기의식 수준과 대응방안 제시를 의도.</p>
토론 질문	<p>Q. 최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뉴스들을 보도하기도 했고, 국내외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의 위협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접근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과 정책적 제안을 듣고자 합니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5	보건안보(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방안
토론 의도	<p>코로나19 등과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과 질병의 등장은 한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전파력은 국제사회에서의 교류는 물론이고 개별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음. 더욱이 이러한 질병들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할 경우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방안, 즉 보건안보 증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의도.</p>
토론 질문	<p>Q. 2019년 말에 등장한 코로나19는 이미 전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는 유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도 사회,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전세계적 사망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문제는 지속적인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 국가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과 같은 보건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1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 평가와 새 정부의 통일정책/비전
토론 의도	<p>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대북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의제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도 남한-북한-미국 삼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것을 의도함. 이와 함께 대북정책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제시를 의도.</p>
토론 질문	<p>Q.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는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담,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었으나 2019년 이후로 다시 경색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2022년 들어서는 북한이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될 새 정부의 대북관계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2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
토론 의도	<p>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남북 관계 돌마구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제시할 의도.</p>
토론 질문	<p>Q.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전선언은 비록 협정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종전선언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3	북한 인권문제
토론 의도	인간 개개인의 삶과 존엄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내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은 대표적인 중진국으로써 인권보호라는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며, 더욱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각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지난 20여년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조직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 참상이 보도되기도 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들어왔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좁게는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넓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4	북한 비핵화 전략(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토론 의도	90년대 초반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북한은 지속적 개발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및 미사일 사거리 능력에 진척을 보이고 있음. 여전히 북한 핵 위협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p>Q.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접근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외부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p> <p>이에, 각 후보자들께서는 지금까지 대북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방법과 함께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p>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5	남북 경제협력
토론 의도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 경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중단 상태에 놓여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남북 경협의 효과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재개 여부 및 재개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현재 양자 간의 경제협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경제협력의 효과와 관련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남북경협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경협이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북경협 재개여부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과 함께 경협 재개를 찬성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양자 간의 경제협력이 재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 분야	
세분 분야	외교
토론 의제 1	미중패권경쟁 속 한국의 외교 방향
토론 의도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조 재편에 있어서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 양상 파악 및 후보자의 미중 외교 방향 점검
토론 질문	Q.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대국간의 관계가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도 하고, 외교적 반경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해왔는데,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안보, 통상, 가치 규범, 디지털 신기술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보여 경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국제정치구조의 급박한 변혁 속에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의 방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 분야	
세분 분야	외교
토론 의제 2	경색된 한일관계와 대일외교
토론 의도	경색된 한일관계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해결책
토론 질문	Q.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대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요한 대외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는 주변 4강과의 안정적이고도 호의적인 외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와 같은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직되고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향후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외교/통상 분야	
세분 분야	외교
토론 의제 3	다자외교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 중견국에서 선진국 외교로
토론 의도	후보자들의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수단 및 선진국으로써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하는 발판으로써 다자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점검.
토론 질문	Q.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국은 1964년 UNCTAD 창설 이래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선진국으로의 공식적인 지위 변경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책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사실 유엔 등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으로서의 국력과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현실은 주변 4강 외교에 압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이제 중견국 외교에서 선진국 외교로 한국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외교/통상 분야	
세분 분야	통상
토론 의제 4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
토론 의도	경제에 있어 대중의존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다변화 전략. 지역별 경제블록화 움직임과 한국의 통상대책에 대한 입장.
토론 질문	Q. 최근 경제와 안보가 고도로 연계되는 주요 강대국들의 통상 정책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제재,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중국과 호주 간 석탄 분쟁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 등 최근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에 따른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 및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실정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RCEP과 CPTPP와 같은 지역별 경제블록화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중 패권 경쟁 국면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 분야	
세부 분야	통상
토론 의제 5	노동, 기후 변화 등 신통상의제와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토론 의도	국제 통상에 있어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움직임이 우리의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의식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토론 질문	Q. 바이든 정부의 등장 이후 2021년 3월 미국은 USTR 통상 의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에 있어 우선 순위 중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공정 성장”의 기초 아래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동 및 기후변화 등 신통상의제의 부상이 한국의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며,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1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토론 의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검증
토론 질문	Q.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시장소득과 함께 세금과 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고려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 격차에 따른 자산불평등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우려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경제불평등은 사회갈등과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
토론 의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검토
토론 질문	<p>Q.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하여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37.3%, 영업이익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양극화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투자의 차이로도 이어지는데, 대기업 노동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3.3배이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중소기업의 3.7배라고 합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59.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투자, 임금 격차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불평등 증대라는 중요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둘 간의 상생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토론 의도	후보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인식과 입장 검토
토론 질문	<p>Q.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인들과 소통하고, 여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자와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각 후보자께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되는지, 규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4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증대
토론 의도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입장과 정책 대안 파악
토론 질문	Q. 과거 증시 활황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1000만명 규모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후보님들도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에서는 각 후보마다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요구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5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 의도	저성장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이해 정도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였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8.6%, 1990년대 6.7%, 2000년대 4.6%, 2010년대 3%대 초반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하락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큼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데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어떤 경제정책을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1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
토론 의도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과 우선순위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토론 질문	Q.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국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4차산업혁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과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2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토론 의도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본다.
토론 질문	Q. 최근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벤처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벤처업계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아동보호·기존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3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토론 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파악해보고 이를 뛰어넘을 혁신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토론 질문	Q. 그동안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체감할만한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년층은 구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후보들께서 내세우는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과 크게 구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4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
토론 의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경제성, 자원마련, 지대추구 등의 이슈를 토론했다.
토론 질문	Q. 화석에너지 사용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이나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가 더 중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5	노동권 및 노동시간
토론 의도	후보자들의 각기 다른 노동개혁의 비전을 염두해두면서 노동시장과 노동권의 문제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토론 질문	Q.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이나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이고 사회적 안전망 역시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공서열제 등 정규직 고용구조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정책의 주요한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1	부동산 안정
토론 의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토론 질문	Q. 지난 몇 년간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젊은 세대에서는 코인이나 주식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위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토론 의도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이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바 이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토론 질문	Q.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3	공적연금 운용 및 개혁
토론 의도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미 몇 차례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여전히 재정고갈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근로세대의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토론 질문	Q.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금고갈의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뒷세대로 넘기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복되는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신뢰성을 손상하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4	가계부채 문제
토론 의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줄이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므로 이 가운데서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토론 질문	Q.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줄이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5	재정건전성 및 조세
토론 의도	증대되는 사회복지 및 인프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 혹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 질문	Q.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응당 필요한 조치이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세 등을 포함하여 국가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1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토론 의도	복지 정책의 범위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담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복지제도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방식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2	저출생·고령화, 인구절벽 대책
토론 의도	최근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적 비전은 무엇인지 의견 파악
토론 질문	Q.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며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사회입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청년 세대의 의식 변화에 따른 불가역적인 결과라면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3	아동 학대, 영아 살해 대책
토론 의도	아동 학대 및 영유아 살해 사건에 관한 후보의 심각성 인식 정도와 함께 정책적 방안에 대한 파악
토론 질문	Q.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 사건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하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등으로 여론에 응답하였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가의 대응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4	노인 돌봄 및 간병인 관련 정책
토론 의도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 및 간병인 처우 개선에 관한 후보의 태도와 정책 비전 파악
토론 질문	Q.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을 위한 간병 인력은 부족하고 병상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이 부족하면 결국 돌봄 노동은 개인 또는 자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간병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 그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5	성폭력, 성범죄 대책
토론 의도	성폭력 및 성범죄에 관한 후보의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안 파악함.
토론 질문	Q. 최근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성범죄 실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수준이라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6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방안
토론 의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는 저출산 위기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후보자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론 질문	Q.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 매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일터에서 경력의 단절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1	기후 위기 대책 (국가온실가스 감축)
토론 의도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 사회 노력에 관하여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의 의견 파악
토론 질문	Q. 세계 각국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당사국총회(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후보는 찬성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2	원전 정책에 관한 태도
토론 의도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비전과 주장을 파악
토론 질문	Q. 원자력 에너지 기술에 회의적이었던 선진국들이 전력난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원전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반면,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복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전을 감축 혹은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후보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3	미세먼지 저감 대책
토론 의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후보의 외교 비전과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외교적 노력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비전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4	AI 및 빅데이터 활용 정책
토론 의도	AI·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을지에 관한 후보 입장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ICT 강국으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공공부문 중 특히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5	디지털 격차·소외 계층 대책
토론 의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후보의 입장과 정책적 비전을 파악
토론 질문	Q.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일상의 각종 생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6	우주 개발 육성 정책
토론 의도	대통령 후보의 우주 개발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성 파악
토론 질문	Q. 우주산업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국가 간 산업 개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주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고 거시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교육
토론 의제 1	국가교육정책비전과 인재상
토론 의도	각 후보자들의 시대 정신 및 과제에 대한 인식 파악 및 교육관 점검.
토론 질문	Q.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수 및 구성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사람,” “인재”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보께서는 그리는 미래인재상은 무엇이며, 그러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국가교육철학 및 장기적 교육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교육
토론 의제 2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정책
토론 의도	코로나 19 국면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4차 산업혁명의 교육 현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 점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파악.
토론 질문	Q.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대면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대전환은 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디지털 시대 학력 양극화에 완화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현장에 어떠한 전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교육
토론 의제 3	대입제도개선: 공정한 평가 그 이상을 향하여
토론 의도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해결책 제시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수년간 사회 엘리트층의 입시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대입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우리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와 연관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동시에 대학입학제도는 초중고공교육과정 수립과 운영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국가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평가의 공정성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정책 목표를 위해 논의가 발전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안은 무엇입니까?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문화
토론 의제 4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토론 의도	차별과 혐오 관련 사회 현황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교육, 인식 개선 및 법제화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점검
토론 질문	Q.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아졌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 기저에 존재하던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강화하고 부각시켰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로 인한 실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디까지 생각이 모아졌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후보자만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문화
토론 의제 5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 의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이후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취약층 지원 방안 및 한국의 미래 산업 구조에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문화산업정책 비전 파악
토론 질문	Q. 지난 2년간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건강한 문화예술산업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문화예술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IV

분야별 토론의제

IV 분야별 토론회

1. 정치 분야 토론회

정치 분야 주제	주제별 의제
I.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정신과 미래비전 ○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 자질 검증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 공정과 정의
II. 정치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개혁 ○ 선거정당개혁 ○ 검찰·법원개혁 ○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III. 국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국회 관계설정 ○ 국민소통 향상 ○ 정부조직개편 ○ 공공기관 개혁 ○ 언론개혁

<p>IV. 안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 ○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정책 ○ 한국의 국방개혁 ○ 사이버 안보 이슈 ○ 보건안보(코로나19 등 감염병)대응방안
<p>V. 통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 평가와 새 정부의 통일 정책/비전 ○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 ○ 북한 인권문제 ○ 북한 비핵화 전략(북핵/미사일 프로그램) ○ 남북 경제협력
<p>VI. 외교/통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패권경쟁 속 한국의 외교 방향 ○ 경색된 한인관계와 대일외교 ○ 다자외교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 중견국에서 선진국 외교로 ○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 노동, 기후변화 등 신통상의제와 한국의 통상 정책방향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1	시대정신과 미래비전
토론 의도	후보가 시대정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토론 질문	Q.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기존의 국내외적 질서는 강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의 시대에는 국가 지도자가 과거를 성찰하고 현 시대의 상황을 진단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후보가 보시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은 시대정신(zeitgeist)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시대정신은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으로 정의된다.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읽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각자 당시의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규정하여 이를 국정 운영의 목표로 삼아 왔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빈곤 탈출을 위한 경제적 산업화를 우선시하였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심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의 산업화와 민주화 업적을 기반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선진화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 추구하였다.

특히 지금은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시기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빈부 격차와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증대, 저성장과 저출산 고착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간의 지정학적 경쟁 격화, 코로나 팬데믹과 포퓰리즘 확산, 이로 인한 세계화의 후퇴와 배타적 민족주의 득세 등의 문제로 국제질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 지도자가 과거를 성찰하

고 현시대의 상황을 진단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대통령 후보들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후보는 이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현재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제시한 큰 그림이 과연 현 시점의 시대정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미래 비전이 타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크게 보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세 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과제는 해방 후 신생독립국으로서 정부를 수립하고 정치질서를 확립하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다음 과제는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경제적 산업화, 마지막 과제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민주화이었다. 다음의 시대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어젠다는 무엇인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선진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국가 등이 과거 대선에 거론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경제적 양극화 심화, 사회갈등 증대, 저성장과 저출산, 미중 갈등 악화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2) 어떻게 구체화하고 해결할 것인가?

시대적 과제를 파악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전에도 대통령이 제시한 미래비전과 국가 어젠다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나 역량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후보 본인이 해당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정치적 자산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였던 시대적 과제와 미래비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해당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 한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을 평가한다면?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2	국가지도자로서 대통령 자질 검증
토론 의도	후보의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
토론 질문	Q.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인성, 가치관, 리더십,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 2개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지도자 중에서 닳고 싶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정치학에서 최근 중요한 연구 경향 중 하나는 국가지도자의 중요성이다. 동일한 정치시스템과 제도 속에서도 국가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성장배경, 교육, 직업,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다시 세계관과 이념의 차이를 야기한다. 지도자의 세계관과 신념은 지도자가 자신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인식하고, 국가 이익을 정의하며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들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업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의 중요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정치적 반대파와 시민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 감염병 위험을 경시하면서 자국의 보건당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방역 지침을 무시하다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도자들도 있다.

한국과 같이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인성과 자질은 더욱 중요하다. 이처럼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중요하지만,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많은 국민들이 유력 후보의 국정 역량이나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가령 한국일보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윤석열 후보의 국정 역량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0%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하였고, 60%가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 2개를 꼽는다면?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덕목은 양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최고 권력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도덕성과 정직함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가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운영능력과 실무능력도 갖춰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은 끝없는 설득과 타협을 수반하므로 소통능력과 사회통합능력도 요구된다.

이처럼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과 덕목은 다양하지만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이 다를 수도 있다. 가령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대통령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을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 정직, 인성 등 대통령의 도덕적 품성을 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둔 여러 조사들을 살펴보면 리더의 품성 보다는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가령 경향신문·케이스탯리서치의 2021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2%가 차기 대선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정책 및 공약'을, 23.9%가 '능력 및 경력'을, 21.8%가 '국민통합 및 소통 능력'을 택하였다. '도덕성'은 19.6%로 4위를 차지하였다. 파이낸셜 뉴스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국회 및 정당·기업·연구소·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로 '국가운영 능력'(24.4%)이 1위를 차지하였고, '미래 비전(21.2%)'과 '사회통합능력(19.8%)'이 그 뒤를 이었다.

대선 후보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국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해당 자질과 덕목의 관점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다.

2) 국내외 지도자 중에서 닮고 싶은 지도자는?

후보의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후보가 어떤 지도자를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롤 모델을 정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정하고, 그 미래와 가장 가까운 성취를 이룬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자신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의 롤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지향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어하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후보가 내세우는 롤 모델 속에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자신의 강점이나 이미지를 담겨있을 것이므로 후보의 홍보 전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의 가장 큰 장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함께 토론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3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토론 의도	후보자가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
토론 질문	Q.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 내의 갈등은 이념, 젠더, 세대, 계층, 노사, 지역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나날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사회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의 표출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현재 사회갈등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 세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사회갈등이 격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한국사회 내 갈등은 지난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갈등은 이념, 젠더, 세대, 계층, 노사, 지역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날이 격화되어 왔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물론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갖기를 열망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갈등이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갈등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많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6번째로 심각하다.

특히 정치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유형으로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의 최대 집단 간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으로 인식하였다. 이 비율은 2006년 70.2%, 2013년 83.4%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치 양극화 현상이 최근에 들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최근 2020년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정치적 쟁점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와 무관한 영역에서도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지적, 도덕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경향이 높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는 혐오와 차별에 기반 한 정치공세나 프레임이 팽배해져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려워진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비교

후보들이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 갈등 중에서 어느 갈등에 주목하는지, 갈등이 격화된 이유를 무엇으로 여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하기 보다는 특정 사회 세력을 대표하려고 하거나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갈등과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또한 한국 사회 내 현존하는 갈등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기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증폭되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지만 다른 갈등도 갈수록 격화되었다. 가령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공정과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나타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동시에 젊은 세대 내에서는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사 간, 계층 간,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동자 간 갈등도 함께 격화되고 있다. 각기 다른 영역의 갈등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후보가 사회 내 복잡다단한 갈등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느 갈등에 주목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회 갈등 격화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론에 대한 견해

사회 갈등이 격화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정치권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후보의 견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많은 갈

등은 주로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초래되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심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작년 <한국정치학회보> 논문은 한국 사회 정치 양극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야 정당은 서로를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라기보다는 투쟁과 승리의 상대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지 오래이며, 일반 유권자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과 다른 정치적 성향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분노, 혐오를 여과 없이 토해낸다." 정치인들이 편 가르기를 통해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고, 사회갈등을 정치적 세력의 기반으로 삼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와 국정운영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통합하기 보다는 분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관련해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면서 정치권 내 분열은 더욱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를 '친일 대 반일,' '민족주의 대 반민족주의,'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등으로 양분하면서 권위주의 보수세력을 개혁,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야 간, 진보와 보수 간의 대화와 협력은 사라졌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와 분열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극복방안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후보가 상호 적대적 정치를 자제하고, 사회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는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문재인 정부의 역사청산과 적폐청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본인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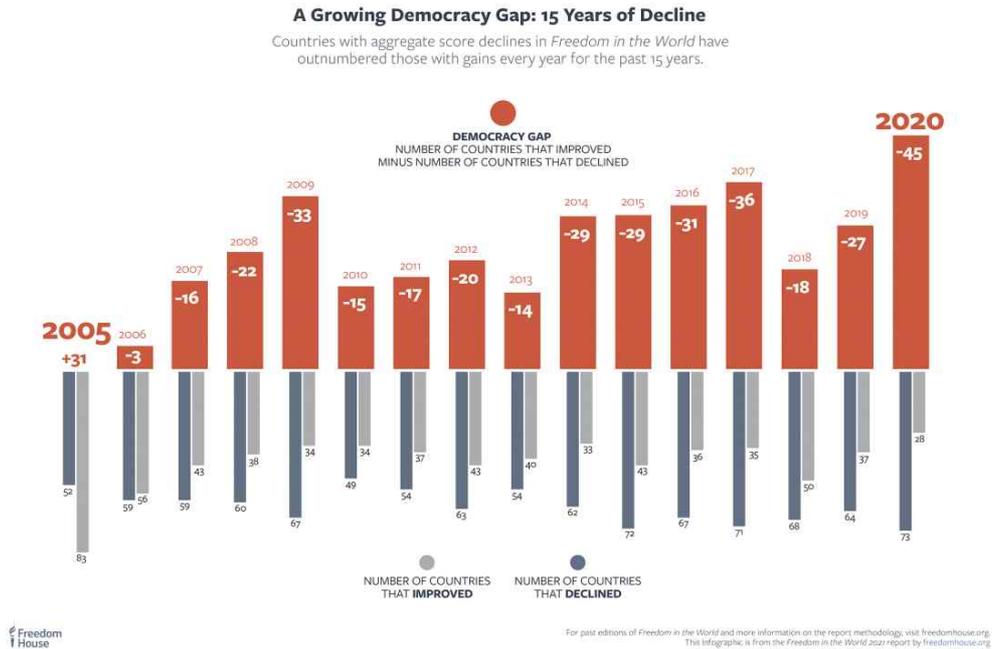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
토론 의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현황에 대한 인식과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의지 검증
토론 질문	Q. ‘민주주의 후퇴’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합법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권력 견제를 약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선거를 통해 위임 받은 권력의 제한적 성격을 잊고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권력을 남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경우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가와 대통령 권력이 비대화되는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자제하지 않았고 편가르기를 통해 정치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빈번하게 들립니다. 후보들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 중 하나가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현상이다.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매년 측정하고 있는 기관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지난 15년 연속으로 자유가 증진된 국가보다 후퇴한 국가들이 더 많았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이 2020년에는 자유가 후퇴한 국가와 증진한 국가의 숫자 차이는 45개까지로 벌어졌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Varieties of democracy) 연구소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지수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를 겪은 주요 국가들은 인도, 헝가리, 폴란드, 세르비아, 터키, 미국, 필리핀 등을 포함한다.

최근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과거 민주주의 붕괴 현상과 차이점을 보인다. 과거에는 군부의 쿠데타나 정치개입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합법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약화시키고 점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권세력이 친정부 인

사를 주요 권력기관에 심어 해당 기관을 통제하고, 언론과 정치 반대파를 탄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규범을 위반해 민주주의 국가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나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의 관점에서 지난 한국 정치를 돌아보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평가와 회복 방안은?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책임성은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으로 나뉜다. 전자는 시민이 정부의 국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지지를 철회하여 정부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복수 정당제도가 존재할 때 수직적 책임성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인 수평적 책임성은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것을 일컫는다.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 예이다. 보통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도입하면서 수직적 책임성을 확립하지만 수평적 책임성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많

은 어려움을 겪는다.

민주주의 후퇴 현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 책임성의 붕괴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평적 책임성 또는 삼권분립의 훼손을 지적한다.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사법부의 독립성, 검찰·감사원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자율성 모두 후퇴하였고 대통령과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3분의 2에 육박하는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한 정부 여당이 다수의 논리로 입법을 강행하고, 기존 관행과 규범을 위반하면서까지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사법 및 준사법 기관들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평적 책임성과 쉼을 같이 하는 법치주의도 함께 위협받았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평등하고, 기존 법률과 관습에 근거해 권력이 행사되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삼권분립이 지켜질 때 법치주의도 유지가능한데 삼권분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치주의도 함께 훼손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하버드 대학의 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가 저술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되나>에서 제시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첫째, 권력 행사에 있어 절제가 필요하고, 둘째, 정치적 반대파를 ‘적’이 아닌 ‘경쟁자’로 존중하는 상호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비판적 관점에 따르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권력행사에 있어 자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 반대세력을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후보들이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대통령의 실패와 과오를 성찰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2) 포퓰리즘에 대한 입장은?

전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포퓰리즘(populism)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로 번역되면서 특정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포퓰리즘은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이다. 다양

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학계에서 널리 수용되는 뮐러(Jan-Werner Müller)의 정의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특정 정치인 혹은 정치세력이 타락한 기득권(‘그들’)과 순수한 국민(‘우리’)을 대비하면서, 자신만이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국민들을 대표하려는 것은 ‘인민주권’ 원리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자신들만이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대표라고 믿고, 정치적 반대파를 국민의 뜻과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정치적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스트가 권력을 잡게 될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포퓰리즘의 유혹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설명을 듣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다음은 정치학자 존 킨의 주장이다. 다음의 주장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민주주의는 겸손 위에서 번영한다. 겸손은 양전하고 순한 성격 혹은 굴종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덕이며 오만한 자존심의 해독제이다. 이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능력이다.”
-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역사청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 협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 의제 5	공정과 정의
토론 의도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검증.
토론 질문	Q. 공정과 정의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약속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약속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고,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1. 의제 선정 배경과 이유

공정, 평등, 정의는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자원이 희소한 가운데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정치학회가 발간한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대안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는 자원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원에는 음식·주택 등 소비를 위한 물질적 자원, 사회적 지위·인정 등 비물질적 자원, 기회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원 등이 포함된다. 모두의 욕망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늘 세상의 냉정한 현실이었고, 따라서 인류의 역사에서 분배는 정치의 핵심적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 경쟁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공정은 사회윤리의 핵심이다. 삶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차별·특혜와 같은 불공정한 권위적 결정에 의해 좌절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법치주의와 같은 현대정치 주요 이상에도 평등과 공정의 원리가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공정과 정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적 가치라고 봐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이슈가 공정이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부터 시작하여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

직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권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 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6월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비슷한 질문인 “경쟁 과정에서 반칙을 범하면 적절한 처벌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78%가 동의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 토론 논점과 쟁점

1)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왜 많은 국민들이 한국 사회 내 공정과 정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가? 먼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증대의 탓도 크다.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경쟁의 결과가 결국 부모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잘못도 크다. 여러 논란 이슈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편 가르기를 통해 내 편을 무조건 감싸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약속이 유명무실하였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되었다.

후보들이 현 한국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 보는지, 불신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단일한 기준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계 올림픽 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등으로 확장된 현재 공정담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공정한 절차이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하고 그로부터 나온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현재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기회의 공정성이며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상이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역에서 공정한 절차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다.

과정의 공정성은 정의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공정한 절차 없이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에 참여하기 전까지 개개인의 출생 환경과 교육 과정에서의 불공평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모두가 공정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때 결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개인의 능력과 능력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없다. 능력의 많은 부분은 자신이 타고난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재능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운의 결과이다. 게다가 노력조차도 부모가 마련해준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기회의 공정만을 강조할 경우 구조적·역사적 불평등을 간과하게 된다. 구조적이고 역사적 차별이나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공정을 훼손하더라도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도 있다. 결과로서의 정의, 실질적 평등, 필요에 의한 배분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요구된다.

3) 적극적 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입장과도 관련 있다. 적극적 조치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해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많은 이들은 적극적 조치가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차별을 바탕으로 차별에 관여하지 않은 후세대의 다수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한다. 적극적 조치 옹호론자들은 과거부터 차별 받아온 소수집단 구성원들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현재와 미래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균등한 기회로부터 배제되어왔던 소수집단에게 일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나 조직의 다양

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여 그들의 참여를 증진할 필요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여성할당제를 꼽을 수 있다. 여성의 과소대표성 또는 남성의 과잉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는 정치적 대표성의 다양성과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 할당제는 남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자, 능력에 따른 공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가령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가 실시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에 따르면 모든 세대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여성할당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특히 20대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인식 차이는 컸는데, ‘의원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20대 여성 응답자의 65%가 찬성하였으나, 20대 남성의 경우 29%만이 찬성하였다. ‘여성할당제는 남성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20대 남성 응답자 비율은 65%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38%뿐이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 ▶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진행 중이다. 능력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능력주의는 공정하다고 여기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1	국회개혁
토론 의도	대의기관인 국회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한국에서 국회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항상 갈등과 대립만이 난무했으며, 그 가운데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또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국회를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의회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민의를 수렴하고 입법을 책임지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맡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 원리상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국회 역시 국민의 정치적 수요를 잘 반영하는 가운데,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가급적 합의를 수반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행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비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 또한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및 규모가 유독 큰 탓에,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공공의 불신은 매우 크며, 이는 국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적절한 국회개혁을 통해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그 결과 국회가 민의의 수렴 및 효과적인 입법 그리고 대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나가는 선순환이 형성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이다. 그런 만큼, 국회개혁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 아젠다일 수밖에 없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회개혁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주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사실 국회에선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법안들이 뒤늦게 그것도 매우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잦았을 뿐 아니라, 당파적·

이념적 성격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정 전반이 돌아가는 경향 또한 매우 강했다. 행정부 감시·감독의 측면에서도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매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제 역할을 하는 데 그쳤던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여론은 ‘국회가 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전후한 시점부터 여야 각 정당들은 모두가 ‘일하는 국회’를 중요한 국회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걸어왔다. 즉 국회의 본질적 역할이라 할 수 있을 민의수렴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아예 퇴출해버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혁 방향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 각론의 차이가 있을 것인 만큼, 후보 간 토론의 주요 논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 국회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워낙 낮은 가운데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만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국회개혁 또한 자주 국회의원 자체와 관련된 인적·제도적 개선의 지향성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국민민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각론에선 후보들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들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토론의 논점 및 쟁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의 제한, 윤리특위의 상설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상시국정감사제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어떤 구체적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는가?
- ▶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면책·불체포특권을 제한하며,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연임에까지 제한을 뒤야 한단 주장 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논란도 없지 않다. 예컨대, 면책·불체포특권 제한의 경우, 국민대표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비롯된 과도한 주장이란 반박이 있다. 또

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의 경우, 민주적 책임성의 부여란 측면에서 위헌성이 강하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들의 소위 기득권 축소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2	선거정당개혁
토론 의도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그간 한국 선거제도는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한 채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을 계속 재생산해왔단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은 공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혁신을 게을리한단 비판을 현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선거 및 정당을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본래 대의민주주의란 선출된 대표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국정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는 정치시스템인바 그 성공 여부는 단연 잘 작동하는 선거제도에 일차적으로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지 못할 시 정치적 대표성은 왜곡되고 이로 인해 민의 또한 잘 반영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오랜 세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의 비중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제가 고착화되었고, 이에 더해 지역주의의 심화라는 추가적인 역효과까지 함께 결과해왔다. 따라서 그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중의 요청 또한 매우 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당은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로서, 주요 이념과 정책을 제시해 지지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직자를 충원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선거제도와 직결된 문제로서 양당제가 고착됨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폭넓게 대변되지 못해왔음은 물론, 이들 거대 양당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급변하는 세대에 발맞춘 참신한 변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단행하지 못해왔다. 특히, 예컨대, 선거 때마다 후보자 공천 등을 둘러싸고 특정 인물을 필두로 한 계파 갈등에 휩싸이는 등 뚜렷한 혁신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선거정당개혁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제도의 경우, 거대 양당의 과점을 제어하고 국민의 의사가 더 폭넓게 대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데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선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 의석수를 축소하고, 정당명부식 등 비례대표제에 따른 선출 의석 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꽤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년 주요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제도개혁이 주된 정치개혁 공약의 화두로 떠오르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개혁은 주요 정치적 이해관계자, 특히 그 가운데서도 현직 국회의원의 재선 등 매우 핵심적인 이해관계들이 직접 걸린 사안인 만큼 그 발전적 변화가 매우 제한됐던 측면이 있었다. 즉, 현직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보전 및 양당의 기존 의석수 확보란 단기적 이익에 가로막혀 다당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획기적 선거제도로의 개편 역시 대부분 저지당해왔던 셈이다.

이러한데,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 시행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매우 힘든 정치과정을 거쳐 통과·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을 낮추고 다양한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해 다원주의적 정치선호가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당제를 정착시켜보잔 본연의 취지를 구현해내는 데 사실상 실패하였다. 심지어, 해당 선거제도의 경우 비례대표 수의 확대는 거의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기상천외하게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오히려 개혁 방향에 크게 역행하는 양상까지 보였다.

그러므로 현재 상당 부분 왜곡된 채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 등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 의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히 다당제 확립이란 목표하에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위성정당방지법’의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을 뿐 특별히 선거제도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선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정당개혁의 핵심은 공천제도의 개선 또는 합리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2년 대선 이후 꾸준히 공직후보자 선출에 당원투표 등 상향식 기제들을 도입해왔지만, 잦은 전략공천 등에서 보듯 여전히 당지도부의 영향

력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므로 정당공천이 중요한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가진 당지도부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된다. 그리고 이렇듯 비민주적인 정당구조하에서 정당은 유권자들의 선호와 점점 동떨어져 갔으며,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 또한 당론이란 명분에 가로막힌 채 표출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이는 그간 거대 양당이 기득권적 의석수를 사실상 보장받음에 따라 변화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받지 않을 수 있었던 탓이 크다. 그 결과, 유권자와 정당원들의 권리는 제약되고 정치적 기득권층의 재생산이 방치되었으며, 정당민주화의 수준 또한 계속 지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정당개혁 특히 공천제도개혁이 후보 간 토론의 주요 논점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후보가 총선 공천에 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만큼, 현재 공약 등의 형태로 명확히 제시된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제도개혁의 측면에서건 인적쇄신의 측면에서건 본 의제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토론의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국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따른 의석 선출 비중이 높은 데다 지역주의 투표행태까지 있어, 양당제가 고착되고 다시금 이들의 기득권과 지역주의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의 다원주의적 선호를 최소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온건한 다당제로의 전환조차 요원하다. 양당제의 유지와 다당제로로의 전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 한국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독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이들만의 구태의연한 기득권으로 인식된 지 오래이며, 선거의 비례성을 높여보고자 어렵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음에도 양당의 위성정당까지 출현하는 등 개악을 면치 못했다. 선거제도개혁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 공천제도를 둘러싼 정당민주화가 미진한 상황하에서 상향식 공천 방식의 강화 등 근본적 제도개혁보다 인적쇄신이나 여성, 청년에 대한 할당분의 증대 등 부분적 개선안들만이 주된 입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당 공천제

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3	검찰·법원개혁
토론 의도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는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그간 한국의 사법체계,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검찰의 경우 형사 절차상 너무 과도한 권한을 보유했음에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취약해 공정한 사법처리에 기여하지 못한단 비판이 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검찰개혁이 단행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첨예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검찰 및 사법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검찰 및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결된 형사소송체계를 합리화하는 문제로서, 사법권력 내부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주입해 하나의 행위자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일컫는다.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받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불편부당한 형사소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을 지칭하는 셈이다.

그간 한국에선 검찰 및 법원의 사법처리 전반이 매우 불공정하단 비판과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이는 검찰 및 법원개혁에 대한 강한 여론을 조성해왔다. 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 내걸었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아젠다 또한 바로 이 검찰 및 사법개혁이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논쟁,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사이의 갈등적 입장은 여전히 매우 첨예한 상태이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본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우선, 검찰개혁의 경우,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세울 것인가와 (거대)범죄를 향한 국가권력

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대한 논점이다. 사실 그간 검찰이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모두 보유해 하나의 기관이 형사소송 절차상 너무 많은 권한들을 집중적으로 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사 관련 범죄가 공정하게 처벌되지 않고 검사의 비위와 부정이 이어지자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경찰에게 1차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하고 이른바 6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들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부 단행되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독점적 통제력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기도 했다. 반면, 검찰 권한의 약화가 국가의 (거대)범죄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반론 또한 상당히 강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고, 기소 여부 역시 검사가 아닌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검찰 자체보단 이를 통제하는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제한토록 하고, 검찰이 계속 대형 비리 사건 등에 대해선 수사를 전담해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윤 후보 또한 공수처의 역할은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경찰은 직접수사권을 지녀야 하며, 공수처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개혁 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경우에도 최근 판결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 확대되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법부 존재의 핵심적 가치는 독립성인데 이 독립성을 과도하게 높일 시 법원이 특권엘리트들만의 카르텔이 될 위험성이 있고, 반대로 법원에 대한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재판이 정치화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진다. 즉 법원개혁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중차대한 의제임에도 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조차 합의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법원개혁의 주요 이슈로는 현재 제약 조건들이 적지 않은 국민참여재판의 대폭 확대, 법원의 사건 무작위 재판 배당 프로그램 강화, 미확정 형사사건

의 판결문 공개, 그리고 법관인사위원회의 개방성을 강화 등이 주로 꼽힌다.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들이다. 주지하듯 현재까지 각 대선 후보들은 법원 개혁에 대해 특별한 정책적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사법개혁이란 큰 맥락 속에서 법원개혁 또한 주요한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의 본질이며 무조건적인 수사권 조정은 자칫 국가의 (거대)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출범시킨 공수처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단 비판론과 기구 창설 초기라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단 옹호론이 공존하고 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과의 관계설정 및 권한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 법원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가? 공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4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토론 의도	지방자치 및 분권과 균형발전을 꾀하는 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그간 한국은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수준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극심한 수도권과밀화 및 지방의 쇠퇴 및 소멸이란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지체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방자치 및 분권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지칭하는 것에서 보듯, 자치와 분권을 통해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곤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현재 모두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방자치 및 분권화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향후 세계적 발전 추세에 역행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도 비화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 및 분권화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 아젠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의 경우, 현재 극심한 수도권과밀화 및 지방의 쇠락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극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던 목표하에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그에 따른 불균형 성장 전략을 의도적으로 실시했고 그 유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들은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균형발전의 기회는 오히려 계속 축소되기만 하는 치명적 악조건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수도권과밀화 현상과 지방소멸의 추세를 그대로 방치할 시 국가경쟁력 전반의 심대한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매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지역균형발전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

에도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우선, 지방자치 및 분권화 개혁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와 주민의 정치적 권한 확대의 필요성으로 그 논점이 집약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지방정부의 제도적 주체성과 권한이 중앙정부에 비해 대단히 취약한 편이다. 이를테면, 지방정부들은 입법 측면에서 그 주체성이 매우 취약한 편으로 현재도 법률의 위임이 있을 시에 한해 조례 수준의 입법만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재정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권한뿐 아니라 주민의 권한 또한 커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및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의 지방자치 및 분권이 긴요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괄목할 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해선 주민참여가 잘 보장되도록 시스템을 새로이 설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상기한 개혁 방향에는 대선 후보 모두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 각론의 차이는 있을 것인 만큼, 후보 간 토론의 주요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지역소멸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패키지가 무엇인지가 주된 논점이 될 것인데, 각 후보들마다 행정수도 이전 등 총론에 있어선 대동소이하지만, 각론에선 일부 차이가 엿보인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역인재 취업과 정주여건의 개선 그리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개의 이전 등을 주요 정책적 입장으로 갖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공공기관 100여 개의 지방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세 후보는 메가시티 계획에는 모두 한 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기관의 대량 이전엔 찬성하지만, 메가시티 계획의 경우 또 다른 지역불평등을 낳을 수 있어 반대한다기 입장이며, 그보다는 지방국공립대 대폭 지원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이슈는 현재 사실상 모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는 주요 의제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

도, 특히 각론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책 패키지의 구성 및 그에 대한 실천가능성을 중심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지방자치 및 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에 어떤 형태로 입법적·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분산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가?
- ▶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면,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향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 정책이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 후보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체로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해당 기관 구성원들의 저항 등이 클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소하며 추진해나갈 예정인가?
- ▶ 현재 메가시티 구상에는 대다수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만의 경쟁력 있는 핵심적 아이디어와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논리인 불평등의 심화는 어떤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정치개혁
토론 의제 5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토론 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구상 파악
토론 질문	Q.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제왕적' 대통령이란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단 사회적 요청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그간 개헌을 전제하지 않은 운영상의 변화에서부터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의 근간을 바꾸는 방식까지 다양한 안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헌법 개정, 즉 개헌 이슈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 헌법이 권력구조는 물론 기본권의 차원에서도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의견들이 많아짐에 따라 꽤 오랜 전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권력구조 관련해서, 그간 '제왕적'이라고 비판받아온 현행 대통령제를 제도 차원에서건 운영 차원에서건 변경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제의 존치에서부터 의회제(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준대통령제) 등 보다 분권적인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단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해왔다.

이렇듯 한국의 경우 개헌의 지향점과 관련해 그 선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프랑스식 준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의 순서로 그 선호도가 불균등하게 분포돼있는 것으로 계속 집계되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그러했듯, 대통령제의 유지를 지지하는 쪽에선 미국과 같은 연임제로의 전환을 주장해왔고, 이 유형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 또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준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주장하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국민적 지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도 권력구조 이슈가 주요한 논점으로 다뤄질 시, 각 후보들의 입장은 개헌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제 운영의 방식을 바꿔 분권화 효과를 기하는 안과, 개헌을 하되 대통령 연임제로 바꾸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 등이 경쟁할 개연성이 크다 하겠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권화 요소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쪽에는, 우선, 개헌을 전제하지 않은 채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선에서 소위 ‘책임장관제’ 혹은 ‘책임총리제’를 운영하자는 입장이 있다. 대통령이 총리와 개별 장관들에게 행정부 통할 및 부처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주고 대통령은 이를 조정하는 가운데 국가미래 비전만을 전담토록 하는 방식 등이 그 골간이다. 물론 이 가운데 청와대의 정책적 기능 등의 축소 등도 함께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이렇듯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개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가능성이 높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해도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그 운영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만큼 권력구조상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렇듯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임장관제’ 혹은 ‘책임총리제’ 등의 시행 방안은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가장 가깝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일정 정도 동조하는 듯이 보인다.

반면, 지금까지 제안되어온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의 경우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처럼 의회 측에 내각에 대한 불심인권을 허용하는 수준까진 아니나, 총리에게 상당한 집행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쪽에선,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이를 인준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국회가 총리후보자를 먼저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왔다. 국회가 주도해 추천한 만큼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부터 비롯된 발상인 셈이다. 현재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이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경우, 물론 이 선택지 속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간 권력분할 등을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보다는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를 가능토록 해 국민들이 그 또는 그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해주는 한편, 행정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둔다. 즉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을 미국식 모델에 최대한 근접하게끔 현행 권력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대선과 총선의 주기상 일치를 피해 이른바 여소야대 즉 분점정부 출현가능성의 축소를 지향할 것인가가 중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양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킬 시 단점정부 출현가능성이 높아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 운영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취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경하는 데는 현재 사실상 모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개헌을 하지 않고 권력구조 운영의 변화를 피하는 방안,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그리고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매우 비중 있는 쟁점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개헌에 찬성한다면,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내각제나 준대통령제로의 전면적 개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가? 현재 여론은 내각제나 준대통령제로의 개헌보다는 대통령제를 존치하잔 입장이 더 강하다.
- ▶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권화를 기해야 하는가? 대통령제란 행정부 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소재가 명백히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만큼, 아예 준대통령제로 변경한다면 모를까,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회에 헌법상 총리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본 권력구조의 작동원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 ▶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한다면,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가? 역설적으로 분점정부 상황이야말로 대통령제의 운영철학과 직결된 견제와 균형의 핵심 기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이 오히려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단 입장도 있다.
- ▶ 개헌에 반대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헌이 전제되지 않을 시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려 시도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 운영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 분야	
세부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1	대통령-국회 관계설정
토론 의도	대통령과 국회 간 적절한 관계설정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역대 대통령들은 여소야대 시 자신의 정책 아젠다들을 입법화 시키거나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여대야소 상황에선 다수 여당을 동원해 국회를 거수기화하고 자신의 아젠다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시 국회의 청문보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무위원들을 그냥 임명하곤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회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해 여당과의 건강한 거리, 야당과의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어떻게 이뤄내시겠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주지하듯,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 양측이 모두 국민들로부터의 주권위임을 내세우며 상호 충돌할 수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해줄 마땅한 민주적 원리는 부재하는 권력구조이다. 그러므로 둘 사이에는 충돌할 위험성이 상존하며, 특히나 여소야대 즉 분점정부일 시에는 이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대통령제하에서 단점정부 즉 여대야소 상황이 구축될 경우 자칫 ‘제왕적’ 대통령이 부상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사실, 다수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선 대통령이 집권당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여당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 해당 대통령의 지지함은 물론 물론, 그 또는 그녀가 실책이나 과오를 범했을 때엔 그 책임을 대신 떠안는 정치적 방패막이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곤 한다. 따라서, 만약 이렇듯 대통령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집권당이 의회 내 다수파로마저 부상하게 되면, 해당 대통령은 사실상 행정 및 입법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제왕적’ 대통령으로마저 거듭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설정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매우 핵심적인 의제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를 둘러싼 견제와 균형, 그리고 효율적 운영의 성패가 상당 부분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각 대선 후보들이 제20대 대선이 이후 국회, 특히 여당 및 야당과 어떤 관계설정을 해나갈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우선,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적절한 관계설정과 관련해선 향후 국회에서의 여야 간 협치를 어떻게 만드러낼 것인가가 관건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18대 국회는 개원 첫해 개회일 중 절반 이상을 파행으로 지새웠고, 19대 국회 또한 ‘식물국회’란 오명을 남겼으며, 20대 국회 때도 여야 간 잦은 물리적 충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즉, 우리 국회는 빈번한 입법교착은 물론 물리적 충돌, 그리고 장외투쟁에 이르기까지 공전의 상황을 매번 수반해온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입법교착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뿐 아니라, 매우 흥미롭게도 여대야소 시에 발생할 여지가 더 컸다. 그리고 이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던 탓이 가장 컸다. 즉, 대통령을 떠받치는 다수 여당이 이른바 ‘날치기’ 등 자당 소속 국회의장을 앞세우거나 수적 우위를 남용한 법안처리를 시도하고, 소수 야당이 국회의장석 점거나 본회의장 농성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원천봉쇄하려 시도했던 가운데 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2012년 국회법 개정에 의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재적의원 또는 안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요건이 도입된 데 더해, 필리버스터 종결에도 역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요건 등이 추가됨에 따라, 여야 모두 이전보다 협치 유인을 더 많이 부여받게 되긴 했다. 하지만 역으로 소수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의도된 공전 사태와 이에 따른 ‘식물국회’의 장기화 공산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대립적 양당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간 협치가능성은 거의 제고되지 못한 채 오히려 입법효율성만 더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사이의 갈등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경우, 국회에서의 공직후보자 검증은 후보 자신과 그 가족의 사생활을 둘러싼 선정적 스캔들로 확대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극렬한 공격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간 대립은 다시금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국회의 인준이 요구되는 국무총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단순 청문회만을 거치면 되는 장관들의 경우에도 여야 간 충돌은 어김없이 수반되었다.

이렇게 볼 때,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의 여야 간 극단적 갈등과 대립은, 어느 쪽이 먼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여당 세력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도와 응집적인 야당측의 무조건적 반대 행태가 팽팽히 충돌해온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대통령과 국회 간 적절한 관계설정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여소야대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정책 아젠다들을 입법화시키거나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국회를 우회해 무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려 시도하다 더 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았다.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할 시, 국정운영 관련해 야당과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나아가 국회와의 협치를 이뤄낼 것인가?

- ▶ 여대야소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다수 여당을 동원해 국회를 거수기화하고 자신의 정책 아젠다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잦았다. 인사청문회 시에도 국회의 청문보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무위원들을 그냥 임명하기 일쑤였다.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국정운영과 관련해 어떻게 여당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야당을 존중할 것인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2	국민소통 향상
토론 의도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민주화 이후 현재는 시시각각 집계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시시각각 반영되는 비판적인 여론과 함께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소통이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는 뜻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민소통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한국에서도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아젠다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자신을 향한 대중의 지지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 사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나 민주화 초기만 하더라도 집권당의 지지가 정책결정에 있어 국정지지율 이상으로 더 중요한 지표였다면, 현재는 시시각각 집계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또는 그녀에게 더욱 중요한 권력자원이 되고 있다. 이른바 정치에 있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핵심적 지표로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현재 변화한 정치 환경 못지않게 중요해진 부분이 바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정보통신매체 환경의 기술적 발전이 이뤄진 덕분에 이제는 누구든 1인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구축됐으며, 정치권과 공생했던 기성 언론들의 뉴스 유통에 있어서의 독점력이나 의제설정 능력은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터넷과 종편 등을 통해 시시각각 반영되는 비판적 여론과 함께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국민소통은 바야흐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식이나 정책의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매우 중요한 국정운영 아젠다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주지하듯, 민주화와 함께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자 했다. 예컨대,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6·29 선언’ 3주년 기념 대화 자리에서 각계 각층 인사 12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1998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총 4차례의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기자회견을 무려 11차례나 열었으며, ‘검사와의 대화’처럼 특정 집단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까지 추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2008년 9월 자신의 취임 200일 즈음에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가졌고, 2009년에는 ‘4대 강 사업’과 세종시 설치 등 각종 정책 현안들을 두고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보다는 주로 ‘대국민 담화’의 형식을 통해 비교적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구상 등을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이전 정부들보다 잦은 소통을 해달라는 강한 국민적 기대 속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스스로 천명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민소통은 적어도 양적 측면에선 이전 대통령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국내 언론과의 기자회견은 총 9차례였고,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국민과의 대화’는 단 2차례에 불과했다. 또한 광화문으로의 청사 이전 등 국민소통 강화 차원에서 제시됐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도입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하에서 국민과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매우 큰 차별점이 있다.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제도가 다음 대통령 시기에든 같은 형태로 계속 운영되리란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지속적 운영 여부를 포함해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및 디지털과의 접목은 차기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인 미디어 등 변화된 인터넷 환경속에서 다양한 사건 및 견해들이 시시각각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종종 대통령을 향한 여론 및 지지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은 항상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셈이다. 그런 만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대통령의 국민소통 방식에 대한 비전 및 계획 등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데 있어 주요하게 구상하고 있는 본인만의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 ▶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방식의 대통령만의 디지털과 접목된 온라인 소통 창구를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현재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 청와대의 광화문 청사로의 이전 등 국민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3	정부조직개편
토론 의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년 가까이 정부조직개편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MZ세대의 부상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이 큰 시점이기도 합니다. 후보자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주지하듯 정부 수립 이후 정부조직개편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텅상 각 후보들마다 행정부 부처의 신설이나 조직 분리 및 통합 등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전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곤 했다. 사실 행정부 조직은 시대의 변화나 행정적 수요에 따라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 해당 시대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이 변했는데 정부 부처가 과거의 조직 및 업무 방식에 묶여 있다면, 국가의 역할 자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조직개편은 이런 합리적 당위에 따라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무엇인가 그들만의 업적이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의 충족을 위해서 추진하기도 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후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 대선에선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을 크게 바꿀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10여 년에 이르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부조직개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 정치적·이념적 양극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각 정당의 후보들마다 자신들만의 정책기조와 이념적 철학에 의거한 대대적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할 소지가 상당해 보인다. 그런 만큼, 정부조직개편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매우 중요한 국정운영 아젠다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이번 대선 이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조직개편의 강도가 강할 것으로 다수 예상한다. 비교적 조직개편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소폭의 정부조직개편만을 시행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밑그림을 계속 밝혀오고 있다. 사실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이 큰 시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패턴 자체 또한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추세 및 MZ세대의 새로운 부상은 기존의 행정조직 체계만론 대응이 힘든 많은 분야들을 계속 파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선 이후 정부조직개편은 한국으로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반드시 국민민복의 증진이어야 한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새로운 정부역할에 필요한 부분은 조직을 만들되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어진 부분은 축소함으로써 정부의 비대화를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부처의 개편이 이뤄지면 단순히 업무만 혼합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 또한 혼재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직문화가 다르고, 다루던 업무도 상이한 조건 속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하여 곧바로 하나의 통합된 효율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업무상 불협화음이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고, 출신 부처에 따른 조직 내 평가르기 양상 또한 일정 정도는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파적 고려에만 치중한 당리당략이나 후보 시절의 공약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행정효율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이 무엇일지 잘 판단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정부조직개편안으로 재정당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매우 강한 불신을 드러내왔고, 현재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기능을 총리실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현재 다수의 부처들에 나뉘어 있는 업무를 새로이 모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즉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부분을, 환경부로부터 기후 부분을 분리해 이를 따로 다루는

새 부처를 창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대대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책의 기초를 여성 인권에서 양성평등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의 주된 구상이다. 아울러, 통일부 기능의 축소 등도 예상된다. 이외에도 주요 후보 대부분이 디지털 혹은 데이터 전담 부처의 신설 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각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연이어 예고하고 있는 만큼, 본 이슈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 전반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본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리민복이란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나? 한계나 문제점은 없는가?
- ▶ 본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과도하게 정파적인 방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4	공공기관 개혁
토론 의도	공공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2021년 이른바 'LH 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에선 다시금 공공기관 개혁 의제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H 임직원의 부적절한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문제가 일종의 국가 차원의 시스템 고장으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문제가 LH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2021년 이른바 'LH 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에선 다시금 공공기관 개혁 의제가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LH 임직원의 부적절한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공공기관 문제가 일종의 국가 차원의 시스템 고장으로 불거진 것이다. 놀랍게도 LH 임직원들은 탈법적 내부정보에 기댄 채 자기들끼리만 개발정보를 공유하며 아예 투자펀드와 부동산개발회사까지 세워놓고 매우 노골적으로 투기를 일삼았다. 공직자가 부동산시장을 망가뜨린 주범이 된 셈이다. 심지어 이후 국감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의 해이는 결코 LH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감에선 다수의 공공기관들에서 낙하산 인사, 임직원들의 비위, 수의계약, 자녀학자금 부정 수령 등 과거부터 지적되어왔던 다수의 문제들이 여전히 전방위로 되풀이되고 있던 의혹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은 탈법적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방만한 경영 자체에도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같이 수익창출을 우선하기보다는 공익 추구를 주된 경영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지만, 손실이 쌓이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역시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므로 이들에게 높은 연봉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높은 연봉에 걸맞게 조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비교적 공공부문의 규모가 큰 한국에서 정작 공공기관 개혁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마다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나 이에 대한 개혁의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도 매우 중요한 국정운영 아젠다로 다뤄져야 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우선, 공공기관의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부채이다. 부채는 공공기관의 현재 임직원에게 사실 별해가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약 3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부채 규모에 비하면 적은 비중이지만, 호봉제로 인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규모는 매년 공공기관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바로 사업비이다. 주지하다시피, 공공기관의 기능은 계속 확대되어왔다. 각종 투자 사업, 기업 지원, 임대주택 등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이렇듯 규모와 함께 그 영향력도 커지다 보니 부정 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기능이 이렇듯 과도하게 커진 것은 정부 기능의 대행자로서 경쟁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탓도 매우 크다. 물론 공공기관의 독점이 그 원리상 불가피한 부문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기업이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정부도 공공기관에 일감을 몰아줘선 안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수단은 경쟁적인 환경의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독점이 인정되는 특수한 부문이 아니고 수익성이 꽤 높은 사업들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간과의 경쟁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한 행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직간접적 연계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공공기관은 인력, 조직, 보수체계 등을 바꿀 때 항상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임원인사 등의 경우, 사장보다도 청와대나 해당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기업들이 그러하듯 한국의 공공기관들 역시 정치권과의 연계로 인해 행정부의 통제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부의 강한 통제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란 매우 역설적인 상황 및 이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왔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사전적으론 이사회를 통해, 사후적으론 평가를 통

해 공공기관을 통제한다. 물론 비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행정부의 약한 사전통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은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히 공기업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다양한 방안들이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만큼, 본 이슈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 전반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공공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 간 건강한 관계 설정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청와대의 인사 기능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캠프의 수많은 조력자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포기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 ▶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특히 불가피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부채들은 어떻게 획기적으로 축소해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 ▶ 공공기관 중 민영부문과의 경쟁이 요구되는 조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과의 경쟁을 독려할 정책적 방안이 있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국정운영
토론 의제 5	언론개혁
토론 의도	언론개혁의 방향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및 구체적 개선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이른바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정 보도 이슈가 급부상한 상태이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주요 미디어 관련 정책 의제로서 언론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 등 또한 중요한 언론개혁 관련 이슈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언론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과 정책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민주화 이후 한국의 언론은 드디어 자율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존속하고 있었으며, 다만 권위주의 시기와는 다른 은밀한 회유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민주화로 인해 다양한 정치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들이 언론을 경쟁적으로 포섭하려 들면서 언론의 영향력은 점차 강해졌다. 또한 다른 한편 언론은 자유시장주의적 경쟁체제 속으로 편입되었고, 차츰 언론기업으로 거듭났다. 즉, 이렇듯 새로워진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언론은 막강한 이익집단으로 거듭나 국가 및 경제권력과 때론 연합하고 또 때론 긴장 관계를 맺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월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을 직접 언급하였고, 이후 노무현 정부로까지 이어지며 언론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의제로 계속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다양한 언론개혁 이슈들이 첨예한 논쟁을 수반하며 부상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둘러싼 공정 보도의 문제가 급부상한 상태이고, 이에 더해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심적 의제로서 언론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혁 등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정치 및 행정과 언론 그리고 나아가 경제와 언론 간의 건강한 관계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언론개혁 방안 역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국정운영 아젠다로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언론이 기사의 정확성을 100%로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할 시 한 쪽에선 이를 이른바 '가짜뉴스'로 문제 삼고, 다른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의 인정'을 요구하는 등 언론을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치에 관련된 '가짜뉴스' 논란은 정파적 자주 정파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된다. 물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을 담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매우 뜨거운 상태이다. 이는 명칭 그대로 언론의 허위 및 조작 보도에 대해 강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법제화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며, 상당한 논란을 동반한 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한쪽에선 언론 보도로 인한 권리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한국의 법체계 속에 이미 명예훼손 등 유사 언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법안이 '가짜뉴스'의 예방이란 본래 취지 이상으로 보도 등 언론 본연의 기능 위축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대선 후보 간에도 본 법안을 둘러싸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양새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허위를 유포할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권만큼 책임의 크기도 같아져야 한다”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향해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면서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두 후보도 그러하듯, 언론중재법의 구체적 대안 등 언론개혁의 내용적 측면에 관해선 대체로 모든 후보가 특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수정 등도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그간 한국에선 언론개혁의 중대한 한 요소로서, 정치권 또는 언

론사주나 광고주 등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의 취재 및 보도 독립성의 강
화가 시급하단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기사 및 보도의 주체인 언론인들
이 사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나 언론사가 정치권 또는 광고주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시 해당 언론의 기사나 보도가 공정하고 중립
적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
선 앞서 언급한 언론중재법과 함께 이렇듯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한 정책의
제들로서 편집권의 독립이나 미디어바우처제의 도입 등 또한 주요한 논점으
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현재 언론중재법을 놓고 표현의 자유냐, 가짜뉴스 등의 방지냐 하는 첨예
한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주요 정당 간 입장 차도 매우 뚜렷해 보인다. 언론중재법에 찬성
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우리 사회의 매우 오래된 논쟁의
소재이다. 또한 최근에는 언론 및 미디어 환경 전반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도 하다. 언론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인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1	한미동맹
토론 의도	최근 한국과 미국 간 합동훈련의 규모 및 횟수 축소와 관련된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논쟁 중인 이슈 등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한 후보자들의 평가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방향 및 비전을 알아보고자 함.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진단과 함께 새로운 정부 이후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제시할 것을 의도.
토론 질문	Q.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안보 확립을 위한 핵심축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에 한국이 일본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북핵문제를 둘러싸고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한미연합훈련 역시 규모나 횟수 면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의 현 주소에 대해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약 7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 양국은 오랜 군사동맹관계를 맺어왔으며, 탈냉전 이후로도 두 국가 간의 동맹의 각 국가의 안보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을 거치며 한미동맹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견지하기도 했으며, 외부적 환경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한미동맹 역시 많은 부침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합동훈련의 규모와 횟수가 이전보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역 동맹국인 일본, 호주 등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 비해 미국의 안보 네트워크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일본과 호주, 인도와 함께 4자안보협의체인 '쿼드'를 구성하고 있으나 한국은 초기 구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국 한미동맹관계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중요한 축이다.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될 각 후보자들의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과 함께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사드배치 문제 및 3-NOs 정책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된 이슈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사드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3-NOs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더 이상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더욱이 '3-NOs 정책'에는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아시아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해 사드의 추가적 배치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이 대중국 연합전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사드의 추가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미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형 아이언돔'의 배치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사드배치 계획은 받아들이지만 추가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 중이다.

2)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한미동맹에 있어 항상 화두에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해 보수그룹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북한에 대한 억지력 유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진보그룹에서는 자주국방을 이유로 최대한 빨리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쟁들은 비단 한국의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 안보에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함께 향후 계획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대한민국 안보와 남북 문제에 있어 한미연합훈련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미 합동훈련이 한국의 안보 확립과 북한에 대한 억지 수단으로서 적절한가?
- ▶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3-NOs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2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 의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군사 재무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여전히 진행 중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외부 안보위협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음. 또한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의존만 해서는 한국의 전략적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들의 제시가 필요함.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자주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각 후보들의 비전과 로드맵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201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 재무장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 대한 핵위협은 여전합니다. 한편, 미중 간의 경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안보 의존은 한국의 전략적 행보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자주적으로 안보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를 위한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군사 재무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외부 안보위협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두 국가는 상대방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선택

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오랜 시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사드 사태에서 보듯 미국에 대한 과도한 안보적 의존은 향후 한국의 전략적 행보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외부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주국방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주국방의 필요성 아래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 및 킬체인 구축, 한국형 경항모 혹은 핵잠수함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제안들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또 다른 그룹에서는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 역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듯 자주국방을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 효율성과 현실 가능성 사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비전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선순위

지금까지 한국은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주요 축으로 삼아왔다.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고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가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주국방 실현과 한미동맹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아젠다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주국방 실현과 한미동맹 강화는 일견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주장이 있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구성요소가 양보되어야 하며, 반대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들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주국방과 관련한 많은 비판들 중에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각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간의 우선순위, 상관관계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자 중에 어디 주안점을 두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새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의 방향성 역시 추측 가능할 것이다.

2) 정치적 이념을 아우를 수 있는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고, 현재도 일부 정책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형 경항모 혹은 핵잠수함 도입이나 핵무기 개발 문제,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 등과 같은 사업들은 다양한 그룹들로부터의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이다. 개중에는 기술적, 재정적 이유를 바탕으로 한 주장도 존재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 등으로 인한 찬반 주장 역시 존재한다. 향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게 될 자주국방을 위한 정책 역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정부 수장이 될 경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주국방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대한민국의 안보를 자주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중 하나로써 한국형 경항모 및 핵잠수함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그에 준하는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또 다른 그룹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경항모 및 핵잠수함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형 경항모 혹은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 ▶ 한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 정책으로 인해 역내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재 동북아지역 군비경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3	한국의 국방개혁
토론 의도	<p>최근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음. 국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기가 도래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음. 국내적으로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된 상황임. 이러한 상황적 변화는 한국의 국방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빠르게 변해가는 국내외적 환경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역시 국방개혁2.0을 추진하며 제4차산업혁명시기와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여러 가지 국방개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목적 및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시를 의도.</p>
토론 질문	<p>Q.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제4차산업혁명시기가 도래하면서 5G로 대표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하였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안보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국방구조와 무기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기체계에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등장하고, 가용한 군 인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력의 손실을 막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상황에 맞춘 국방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방개혁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듣고자 합니다.</p>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현재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 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시기가 도래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가들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 위협 역시 상존하기에 한국은 안보확립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국방구조 개

편과 무기체계화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마주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따라 향후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군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며 한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은 현실가능성과 효율성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군수개혁과 여군비중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킬체인 도입 등도 재정 및 기술적 측면에서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근미래 부족한 군병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국방 확립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안보 확립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국방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향후 국방력 확립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이재명 후보는 국방개혁 문제와 관련해 향후 징집병 규모를 15만명 규모로 축소하는 한편 ‘선택적 모병제’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북한 핵위협으로부터의 대응 측면에서 킬체인(선제타격능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국방개혁과 관련해 두 후보 모두 일부 이슈만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에 포함된 내용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 평가

지금까지 한국은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외부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국방개혁을 추진해온 바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방개혁2020’을 추진한 바 있으며, 뒤이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307’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국방개혁 2.0 정책 아래 ‘첨단 ICT기반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 능력 보장,’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등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육해공군 구조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출범, 병력규모 감축 및 무인화, 기동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전 정부들의 국방개혁 정책은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일부 정책은 효과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과거 정부들의 국방개혁 정책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성패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 역시 이전 정부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목표와 비전, 실천방안 제시

지금까지 이전 정부들의 국방개혁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왔지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국방정책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마주한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한국의 국방력과 안보에도 계속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의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함으로써 안보 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방인력 확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징병제의 폐지와 함께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병제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 ▶ 현재 많은 국가들이 5G와 AI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장비 및 무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ICT에 기반한

군사력 운용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기본 구상은 무엇인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4	사이버 안보 이슈
토론 의도	최근 들어 신홍안보 이슈가 전통안보 이슈와 연계되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사이버 안보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간헐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 사이버 안보가 한국의 전통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안보에도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각 후보자들의 위기의식 수준과 대응방안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최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뉴스들을 보도하기도 했고, 국내외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의 위협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안보 위협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접근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과 정책적 제안을 듣고자 합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미중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강대국 간의 안보 경쟁은 국제적 이목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통적 안보 이슈만큼이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은 물론이고 동맹국들의 안보에도 해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에서부터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단 특정국가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타국의 안보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해킹공격을 시도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타국의 첨단기술

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안보는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전통적 국가안보 이외에도 경제, 사회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분야인 것이다.

한국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과거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첩보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여러 국내외 언론과 사이버 보안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최근 수년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지적하며 국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북한을 비롯한 타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의 범인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래의 전쟁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도 치열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북한 역시 사이버 안보 대응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 안보환경은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의 확실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한국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환경 평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경쟁의 주요 무대 중 한곳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와 같은 지역 강대국 역시 한반도 안보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핵 위협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를 중심으로 한 비전통안보에 대한 우려 역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같이 한국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환경이 실제로 악화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 역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 위협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향후 한국의 안보 확립을 위한 정확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환경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식과 평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2) 새 정부의 사이버 안보 대응전략

사이버 안보에 대한 후보자들의 개별 인식과는 별도로 최근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부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사이버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담조직의 수준과 운영방식 등을 비롯한 사이버 안보 대응전략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현재 한국의 사이버 안보에 있어 최대 위협요인으로는 북한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한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사이버 첩보는 한국의 안보에 있어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하는가?
- ▶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동맹체를 한국, 독일, 일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이버 안보환경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국만의 대응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고려해볼만 한데, ‘파이브아이즈’와 같은 동맹체 가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안보
토론 의제 5	보건안보(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방안
토론 의도	<p>코로나19 등과 같은 초국경적 감염병과 질병의 등장은 한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전파력은 국제사회에서의 교류는 물론이고 개별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음. 더욱이 이러한 질병들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새로운 질병들이 등장할 경우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방안, 즉 보건안보 증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의도.</p>
토론 질문	<p>Q. 2019년 말에 등장한 코로나19는 이미 전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는 유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도 사회,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전세계적 사망자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문제는 지속적인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 국가의 사회, 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종 감염병과 같은 보건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각 후보자들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국제사회의 예측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시대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으며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2022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3억 7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56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초래하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WHO, 2022).

2000년대를 전후해 사스(SARS), 조류독감(AI), 신종플루(Influenza A),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메르스(MERS),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는 모두 한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지역과 전세계를 아우르는 초국경적 수준의 전염력을 보여준 바 있다. 더욱이 과거의 전염병 사례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약 250만명, 유럽에서 약 17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큰 인명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WHO, 2022). 즉, 코로나19는 일반적으로 방역체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선진국에도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심화로 개별 국가의 방역체계만으로 감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는 점과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점이 현실적 한계로 부각되며 팬데믹 종식의 길은 멀어 보인다.

한국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종의 발생과 함께 한국 내에서도 확진자 숫자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역시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이와 같은 초국경적 수준의 전염력을 가진 신종 질병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질병 등과 같은 보건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정책의 장단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2020년 초 한국에서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약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재인 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총력대응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때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의 확진자 숫자를 유지하며 비교적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K-방역을 국제사회에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며 백신 확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후 백신패스 도입 등을 통해 확진자 및 위중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진자

숫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보다는 새로운 변이종의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거나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급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실패로만 규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종합적인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는가, 아니면 성공적이었는가? 실패의 요인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2) 코로나 19와 같은 초국경적 질병에 대비한 새 정부의 장기적 대책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며, 새 정부 역시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질병 및 감염병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전염력을 가진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한국은 이전에도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받은 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초국경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종 질병에 대한 연구전략, 백신 개발 및 확보 전략 등과 같은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K-방역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부에 지명된 후 K-방역은 정부보다는 국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신국가책임제,’ ‘공공의료 강화’ 등을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방역강화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성급한 위드코로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은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인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상호협력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 ▶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국내외 매체를 통해 북한에도 코로나19 의심자 및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의학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 역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 여파는 인접한 한국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은 보건안보 측면에서의 남북협력 추진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1	문재인 정부 대북전략 평가와 새 정부의 통일정책/비전
토론 의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대북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의제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도 남한-북한-미국 삼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것을 의도함. 이와 함께 대북정책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는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회담,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었으나 2019년 이후로 다시 경색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2022년 들어서는 북한이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될 새 정부의 대북관계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고착화되었던 남북 간의 갈등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된 바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북한이 대표단 및 선수단을 파견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이후 2018년 4월 판문점에서의 제1차 정상회담, 5월의 제2차 정상회담, 그리고 9월 평양에서의 제3차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유례 없는 속도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군사관계에서도 획기적이었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되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

대감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중재 아래 2018년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2018년 한해 동안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의 실질적인 결렬을 비롯해 남북관계 역시 여러 이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며 다시 한번 경색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초기에는 이전 정부들이 이루지 못한 다양한 성과들을 내며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으나 현재의 남북관계가 갈등 국면을 이어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패의 요인과 배경에 대해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원칙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탈냉전 이후 30여년 간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저마다의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고 북핵 문제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현실적인 대북정책 추진 계획 및 방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전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남북 간의 갈등관계를 전환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방향과 실천 방법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과 판단은 향후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와 원칙, 실천방안에 대한 구상

대북 정책은 역대 한국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접근법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경제협력 문제, 인권문제, 인적 교류 문제 등 남북 간의 다양한 이슈들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변해왔다. 역대 한국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마다의 대북정책 목표와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방식과 접근법을 통해 북한 관련 문제를 대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목표와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며, 어떠한 실천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안보 확립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현실적 목표와 실천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물론이고 9.19 군사합의 등과 같이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들이 있다. 이 당시 양자 간에 맺어진 합의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역시 향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승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와 북핵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주목하고,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 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고강도의 제재 조치 부과와 같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2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
토론 의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남북 관계 돌마구 마련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진행 중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의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후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전선언은 비록 협정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70여년 동안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체제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종전선언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현 정부 초기 남북관계에는 훈풍이 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 합의의 불발과 지지부진한 비핵화 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이내 경색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역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하였고, 종전선언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나 해외 순방시 정상회담 등에서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전하며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후 한 달이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서의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외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및 여당에서는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남북 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선부른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한편, 국외에서도 한국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국정부의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미국은 무의미한 제안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비핵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미관계 역시 싱가포르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원동력과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이 과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후보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행되어야만 다음 정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종전선언의 의미와 효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해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한 논의이다. 종전선언이 아무리 협정과 같은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70여년 간 이어져 온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전선언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선부른 종전선언 추진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적 조치일 뿐이며, 비핵화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할 뿐이라는 주장 나오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여전히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과연 종전선언은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쇼(show)로서 향후 비핵화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과의 갈등만 조장할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

2) 종전선언 추진 여부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여전히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베이징에서의 종전선언 구상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그렇다면 종전선언 여부는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후보들 간에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을 위한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 보고 있다. 비록 종전선언이 형식적, 선언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상태가 ‘정전’ 상태보다 진전된 형태임은 사실이고, 이렇게 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피력한 바 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 및 유엔연합사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현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하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추진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과의 간극을 보여준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상이한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인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3	북한 인권문제
토론 의도	인간 개개인의 삶과 존엄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내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국은 대표적인 중진국으로써 인권보호라는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며, 더욱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각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지난 20여년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조직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 내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 참상이 보도되기도 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들어왔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좁게는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넓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현재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투영된 특수성을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인권법과 규범에 의해 다뤄지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별 국가의 주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국가나 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권은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나누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평화, 환경, 발전에 대한 연대와 단결의 권리가 주목 받고 있다. 즉, 21세기 들어 인권 문제는 단순히 개개인의 권리침해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사회, 그리고 인류의 생명, 평화, 그리고 번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가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불거진 북한인권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 북한인권 의제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의해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악용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2021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가치외교가 미국 외교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북핵문제 이후 다음 의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 역시 2009년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 절차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2019년에 실시된 제3차 회기에서 북한은 이전과 달리 다소 전향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애인, 여성, 아동의 권리 등 취약계층의 권리와 인종차별철폐조약 비준 등 국제인권협약의 제도화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이런 북한의 태도가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화적 조치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 문제에 북한 내부의 점진적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2024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제 4차 『보편적 정례검토』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개선의 의지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의 당면한 안보문제에 가려져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의제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탈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 정치·경제·사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인권 관련 북한 정권에 대한 관점

북한 인권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북한 정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성분제도, 종교의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심각한 상태이다. 반면, 최근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권리는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인권의 가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파트너로 볼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은 결국 북한 인권을 외부의 정치,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또는 연성적 접근을 통해 북한 내부로부터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양 극단의 두 가지 이외에 대안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인권문제 해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두 번째로 한반도의 정세와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는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인권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를 더한 복합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라는 잣대를 한반도에 적용하려할 때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평가 및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접근

후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매년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국제사회를 통해 규범적 차원의 성명서를 넘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봄으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점과 이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기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해 “옳은 결정”이라고 옹호

한 바 있으며, 소위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지한 바 있다. 이런 과거의 발언들을 통해 정치·외교적 압박을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공약을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다. 다만 2021년 12월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북한인권 결의안에 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북한 난민문제는 한국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난민보호를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적 난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난민보호에 있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외국 정권 또는 정부에 대한 국내 기업의 협력이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4	북한 비핵화 전략(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토론 의도	90년대 초반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북한은 지속적 개발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 및 미사일 사거리 능력에 진척을 보이고 있음. 여전히 북한 핵 위협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접근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외부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에, 각 후보자들께서는 지금까지 대북 핵무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방법과 함께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90년대 초반 북한 핵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에도 혼풍이 불던 시기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는데, 2010년 후반 이후 북한은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두 곳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총 30-60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공장이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2022년 들어 1월 한달 동안 북한은 총 7차례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해오고 있다. 물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핵탄두 탑재 목적으로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중요한 안보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18년 4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 실험·ICBM 발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지만, 이러한 결정사안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장담할 수 없으며, 가장 최근인 2022년 1월 미국 싱크탱크인 ‘우드 로윌슨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올 하반기 북한이 신형 ICBM과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여전히 좁게는 한반도의 평화에, 넓게는 국제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제는 한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모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해결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북핵 접근법만 양산한 채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해왔다. 한편,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같은 관련 주변국들 역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서 한국 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과거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 핵개발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한국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 이슈 중 하나였으며, 지금까지 쉽게 풀지 못한 난제였다. 지금껏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모두 다양한 관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의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과거 정부 정책들의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비핵화 전략 방향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상이한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으며,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반대 그룹의 저항이 심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 외교적 방안을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그룹에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들은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적 분열과 도전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비핵화 전략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 관점에 관계 없이 두 그룹의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비핵화 방안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방침을 계승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 검증을 포함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의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는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프로그램 역시 진척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북한 핵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 핵문제를 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폐지를 위해 미국 등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의 입장과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출 것인가?
- ▶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양자, 다자적 외교접근법을 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법은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 이

위의 다른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가?

- ▶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의 제재를 부과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정치 분야	
세부 분야	통일
토론 의제 5	남북 경제협력
토론 의도	200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 경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중단 상태에 놓여졌으며,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남북 경협의 효과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재개 여부 및 재개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의도
토론 질문	Q.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0여년이 되었지만 현재 양자 간의 경제협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나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경제협력의 효과와 관련해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남북경협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경협이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북경협 재개여부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의견과 함께 경협 재개를 찬성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양자 간의 경제협력이 재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북한 경제협력은 2008년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의 5.24 조치, 그리고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의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중단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남북한 간의 교역은 교역액과 교역 건수에 있어 2016년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며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희망이 나왔고, 정부 역시 일련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철도공동조사 등과 같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 간 경제협력은 중단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 간의 경색된 관계 등을 고려하면 양자 간의 경

제협력 재개는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지금까지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된 상황이며,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 여부는 다음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양자 간의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아질 경우 갈등적 상황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경협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며, 더욱이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와중에 정부가 경제협력을 일방적으로만 추진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경협을 이끌어가려 한다면 국제사회와의 갈등 역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남북경협을 중단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여 강제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더욱 더 핵무기 개발에 매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경협의 기여 여부는 물론 향후 남북경협 재개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고, 더 나아가 남북경협 추진 방식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통일,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남북 경협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남북 경협이 심화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및 비핵화에 기

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입장과 접근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입장 및 추진방향

남북 경협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과연 남북 경협이 재추진되어야 하는가? 만약 재개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재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상황이나 대외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이 독자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 남북 경협 재개를 추진하더라도 언제든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거나 다시 좌초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지속적인 남북경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접근방법과는 차별화된 방안을 다음 정부가 구상해놓을 필요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카드를 제시할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북한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이고 인권 및 개인의 자유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외에 북한의 경제 성장 및 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관점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남북경협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입장에 어떻게 조응하며 경협을 추진할 것인가?
- ▶ 남북 경협을 남북 간 군사 및 정치문제나 북한 인권문제 등과 연계하며 추진되어야 하는가?

외교/통상 분야	
세부 분야	외교
토론 의제 1	미중패권경쟁 속 한국의 외교 방향
토론 의도	동아시아 지정학적 구조 재편에 있어서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 양상 파악 및 후보자의 미중 외교 방향 점검
토론 질문	Q.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대국간의 관계가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기도 하고, 외교적 반경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해왔는데,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안보, 통상, 가치 규범, 디지털 신기술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보여 경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국제정치구조의 급박한 변혁 속에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의 방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최근 국제정세는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대전환의 국면에 있다. 우선 우리는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새로운 전지구적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결정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패권의 상대적인 쇠퇴 속에 신흥 강대국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안보, 통상, 가치 규범, 디지털 신기술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서 전방위적으로 경쟁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전략적 경쟁 양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한국은 담론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수사 아래 결국 19세기 수준의 균형 외교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평가한다 (하영선 2021, 8쪽).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안보, 외교 측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북한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역내 행위자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문재인 대통령의 ‘중립적 균형외교’와 같은 외교적 노선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 (like-minded countries) 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공고히 하여, 쿼드 플러스, 민주주의 정상회의, 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태평양 구상 등, 대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질서 설계를 본격화 하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한국은 어떠한 외교 정책적 비전과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어가는 정책 영역에서 구체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복합 상호 의존 시대에 각 이슈 별로 미중간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맞춤형 정책 선택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다른 이슈에 대한 정책 간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미국의 상대적인 패권 쇠퇴 및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공격적인 존재감 표명과 같이 미중 패권 경쟁이 전개, 심화되는 국제정치구조의 급박한 변혁 속에 한국은 더 이상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균형 외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중국 견제 동맹 외교가 가시화, 구체화 되고 있고 중국 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역사결의를 통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권력 공고화 작업이 착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 이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고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시각 및 거시적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미중패권경쟁 속 한국의 핵심 외교 방향, 2022년 균형 외교의 구체적인 모습,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질서 재편 및 민주주의 가치 기반 다자주의 네트워크에 가입 여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외교 전략, 미중 간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규범 경쟁, 특히 신장, 위구르, 홍콩 및 중국 인권 문제에 있어 한국의 외교 방향이 될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미중 외교 정책 관련 공약 및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유능한 외교”를 언급했고, 윤석열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할 것이며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1년 11월 7일). 그러나 역시 두 후보 모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외교정책이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

성 문제 및 현실성 문제가 검증되어야 하고 또한 두 후보의 미중 외교정책이 기존의 균형외교 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미국과 중국은 각각 이념에 기반한 경직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과연 이슈별로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외교적 입지를 현실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제정치에서 외교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슈별 대미/대중 정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속에서 가능할지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외교/통상 분야	
세부 분야	외교
토론 의제 2	경색된 한일관계와 대일외교
토론 의도	경색된 한일관계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해결책
토론 질문	Q.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대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요한 대외 조건입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는 주변 4강과의 안정적이고도 호의적인 외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와 같은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직되고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향후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일본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외교,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한미일 네트워크의 중요한 파트너임에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위안부와 강제 동원 문제와 같은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해 양국에서 동시에 국내 정치화되어 지난 5년간 극도로 경색되었다. 양국의 정부 차원의 소통의 채널도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소통만 오고 갔다. 여기에 더해 비자 면제 정지 및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 간의 교류도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경색은 경제적, 외교적 손실로도 이어졌다. “2011년 이래 10년간 양국 간 교역량은 30% 이상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액은 2021년 대비 1/4로 축소되었다” (손열 2022, 71쪽).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미일 협력이 작동하지 않아 대북 공조가 악화되고 한국의 지역 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일본이 주도해 온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FOIP),’ 쿼드, CPTPP 등이 지역 차원의 개발, 안보, 무역 협력의 중심적 기제로 부상함에 따라, 일본과 거리를 두며 참여에 주저한 한국은 지역 외교의 활동 공간이 현격히 축소되는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다 (71쪽).

따라서 후보자들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경색된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근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극도로 경색된 한일관계의 회복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주변국 외교 정책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본 의제의 논의를 통해 현재 경색된 한일관계의 원인 및 타개책에 대한 후보자의 가치관 및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쟁점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입장, 한미일 협력네트워크 복원 방안, 한일 정부 간 신뢰회복,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교류의 재개 방안, 또한 한국의 CPTPP 가입을 계기로 한 한일관계 회복 타진 등이 될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기반해서 한일관계를 발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 교류와 분리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투트랙 접근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2021년 11월 26일). 윤 후보는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이라고 지칭”하고,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2021년 11월 26일). “그랜드바겐 방식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문제를 한 테이블에 놓고 협상하고 과거사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파이낸셜뉴스 2022).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지난 5년간 과거사, 영토문제, 수출규제 등 복합적인 이슈에서 일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 및 민간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또한 위안부 합의 및 강제 징용 판결 이행 등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외교/통상 분야	
세부 분야	외교
토론 의제 3	다자외교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 중견국에서 선진국 외교로
토론 의도	후보자들의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외교 수단 및 선진국으로써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하는 발판으로써 다자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점검.
토론 질문	Q.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국은 1964년 UNCTAD 창설 이래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선진국으로의 공식적인 지위 변경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책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사실 유엔 등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으로서의 국력과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의 현실은 주변 4강 외교에 압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이제 중견국 외교에서 선진국 외교로 한국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지난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1964년 UNCTAD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나라이다. 이를 두고 한국 내에서도 선진국으로의 공식적 지위 변경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르는 선진국으로써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 등 의견이 나뉘었다. 실상 유엔 등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으로서의 국력과 명성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그간 해왔던 가교역할 (bridge), 회의소집자 (convener) 등의 중견국 외교 (middle power diplomacy)를 넘어서 의제선정자 (agenda setter), 재정부담자와 같은 규범 선도국 외교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 역할의 변화를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과제가 보건,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 변혁 등 복합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 및 다양한 사적 행위자들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다자주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들의 공조

및 협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이에 이슈별 또는 보편적 국제기구인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이익의 조정 또는 조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익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세계적 강대국들로 둘러 싸여 있어 외교적 제약이 있는 한국으로써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 외교의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정당성을 획득하면서도 주위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수단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의 국력 및 지위가 선진국으로 변화함에 따라, 후보자의 다자외교에 대한 인식의 수준 및 정책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외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판단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4강외교 및 대북관계에 압도되어 온 한국의 외교 정책을 한국의 글로벌 지위 및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맞게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의제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보편적 가치 창출 및 증진에 기여하는 다자외교추진의 필요성 및 현존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대한 인식 및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 기후 위기, 전세계적인 내전의 장기화로 인한 난민 위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복합적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한국의 선도적 다자외교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현재 어떤 대선 후보도 다자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나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에게 다자외교정책이 얼마나 경시되는지 반증하고, 얼마나 국제사회의 기대치와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국내적 인식 간에 간극이 큰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글로벌 복합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래형 외교를 수립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다자외교에 대한 인식 수준과 비전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이 한국의 외교 다변화 전략 중 하나로 다자외교를 바라보는 시각, 보건 및 의료 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신기술 관련 규범 형성에 있어서 미중 패권 경쟁 사이의 한국의 입장, 한국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기여 및 공적개발원조정책 (ODA)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아가 양자외교 및 다자외교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문제 또한 입장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다자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기구에서의 리더십 진출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세계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인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국제사회가 선진국으로서의 의무 준수 및 이행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으로써는 국내 정책 및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공약이 좋은 예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국제기구에서의 업그레이드 된 규범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규범의 높은 국내적 이행 수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통상 분야	
세부 분야	통상
토론 의제 4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
토론 의도	경제에 있어 대중의존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다변화 전략. 지역별 경제블록화 움직임과 한국의 통상대책에 대한 입장.
토론 질문	Q. 최근 경제와 안보가 고도로 연계되는 주요 강대국들의 통상 정책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제재,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중국과 호주 간 석탄 분쟁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 등 최근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등에 따른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 및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실정에 있어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RCEP과 CPTPP와 같은 지역별 경제블록화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중 패권 경쟁 국면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5G,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과 산업 분야에 있어 수출 통제의 수준을 높이는 등 경제와 안보의 연계가 고도화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및 정찰 기술 산업 부문의 59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했다 (이승주 2022, 136쪽).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볼 수 있었던 관세를 통한 대 중국 압박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 보고 있다 (136쪽).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적인 공급 사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다양하고 건강한 공급자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136쪽). 따라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안정화를 위해 현재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대만 등 기술과 생산 능력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 제재,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중국과 호주 간 석탄 분쟁으로 인한 요소수 대란 등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는 전세계적 추세의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

국은 바이든 정부의 ‘기술-생산-소비의 생태계’ 형성을 위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와 주요 첨단 산업의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양자 차원, 지역적 차원, 다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42-143쪽). ‘복원력 있는 공급 사슬 이니셔티브 (Resilient Supply Chain Initiative, RSCI)’의 추구하고 같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의 노력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39쪽).

또한 미중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노력은 지역별 경제 블록화 움직임과도 연계되어 있다. 지난 수십년간 WTO를 통한 전세계적 무역자유화 협상 타결이 교착 상태에 머문 가운데, 각 지역별 메가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을 통한 경제 블록화 움직임이 국제 무역 질서를 형성하는 큰 흐름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18년 12월 CPTPP가 발효되고 2020년 11월 RCE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크게 두 개의 메가 FTA가 존재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정치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WTO를 넘어서는 자유 무역 이슈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CPTPP와 WTO 정도의 기존의 자유 무역 수준 및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누적 원산지규정 등을 통해 기존의 중국 중심의 공급 사슬을 공고화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되는 RCEP 사이에서 미중 간 향후 무역 질서 구축을 두고 규범적 갈등이 예상된다 (139 & 147쪽).

2. 토론 논점 및 쟁점

핵심 쟁점은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공급 사슬 재편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구상, 미국의 기술-생산-소비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한국의 협력 및 외교적 기회,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한 후보자의 기대 및 대응책,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최근의 국제 통상 현실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 재편에 영향을 미칠 CPTPP와 RCEP의 관계 설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 및 방향성, 지역 경제 블록화로 인한 안보 효과에 대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험 관리, 다자무역협상 진전을 위한 한국의 입장 정립 및 전략 수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에도 공급망 등 통상에 관한 전반적인 공약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12일 공약발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안보 및 산업주권을 실현하고” “임기 내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튼튼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 대응을 위해 디지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2022년 1월 12일). 윤석열 후보는 경제와 안보의 융합을 바탕으로한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해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서 국방, 외교, 안보를 경제로 확장한 “경제안보”를 기조로 내세웠다 (연합뉴스 2022년 1월 24일).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미중패권경쟁 국면이 안보와 경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후보자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RCEP과 CPTPP 두 개의 지역 경제 블록에 있어 한국의 역할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 분야	
세부 분야	통상
토론 의제 5	노동, 기후 변화 등 신통상의제와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토론 의도	국제 통상에 있어서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 움직임이 우리의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의식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토론 질문	Q. 바이든 정부의 등장 이후 2021년 3월 미국은 USTR 통상 의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에 있어 우선 순위 중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공정 성장”의 기조 아래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노동 및 기후변화 등 신통상의제의 부상이 한국의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며,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바이든 정권의 등장 이후 2021년 3월 미국은 USTR 통상 의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향후 통상 정책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는 ‘글로벌 공정 성장’의 기조 아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고, 노동자 중심의 통상 정책은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마련하며, 중국의 강압적,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2021년 3월 1일).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 상대국의 노동자들의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신통상 이슈가 향후 국제 무역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수출 기업들의 노동 기준 및 준수를 점검하고 탄소배출제로 달성을 위한 국내적 혁신을 달성함과 동시에 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adjustments) 도입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국이 노동, 환경, 인권 등 신통상의제의 집행에 동맹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과 기준을 수립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의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 및 대책 마련

점검이 요구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주요 후보자들의 통상정책 관련 명확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노동 및 환경에 관한 국내 산업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의 강화된 신통상의제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크게 노동권 및 환경 기준 강화가 우리의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들의 선제적인 문제의식과 한국의 이에 적합한 산업 통상 정책 구상 및 수립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통상의제에 대한 대중국 압박에 있어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노동, 환경, 인권과 같은 신통상의제의 부상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선진국 수준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산업 정책 수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신통상의제 관련 국내 산업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며, 후보자께서 구상하시는 국내 산업과 관련된 노동, 환경, 인권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 규범 환경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누어주시십시오.

2. 경제 분야 토론회

경제 분야 주제	주제별 의제
I. 경제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증대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II. 경제성장 및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 ○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 ○ 노동권 및 노동시간
III. 민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안정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공적연금 운용 및 개혁 ○ 가계부채 문제 ○ 재정건전성 및 조세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1	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토론 의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검증
토론 질문	Q. 한국 사회의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시장소득과 함께 세금과 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고려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불평등한 나라에 속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 격차에 따른 자산불평등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우려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경제불평등은 사회갈등과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제 선정 배경과 이유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속히 악화되어 왔다. 경제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경제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구 간에 얼마나 불균등하게 배분되는가를 측정한다. 소득불평등은 시장에서 벌어들인 시장소득에 기반 한 불평등지수와 시장소득과 함께 세금과 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고려한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에 기반 한 불평등지수로 구분된다. 시장소득을 중심으로 지니계수를 살펴볼 경우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0.40으로 OECD 평균인 0.47보다 낮고, OECD 38개국 중 35위로 차지한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경우 OECD 평균인 0.32보다 높은 0.34로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통계청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가계소득은 하위 20%의 5.85배를, 2019년에는 6.25배를 기록하였다.

동시에 상위집단의 자산 총액이 증가하면서 자산 불평등도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더 높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정부의 반복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총자산 불평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딧스 위스의 '2019년 글로벌 자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8년 한국 상위 1% 부자의 자산 비중은 10.3% 증가하였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증가에 따라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하였다. '2021년 6월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 사회'라는 데 동의한 응답은 전체의 36.9%이지만, 20대의 경우 61.6%가 한국이 헬조선 사회라는데 동의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10년 뒤 부모에 비해 더 운택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20대 중 34.2%만이 동의하였다.

한국 사회 내 경제적 불평등 증가는 정치·사회·교육·문화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 타인에 대한 불신,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증가하며, 주관적 안녕감은 감소한다. 또한 범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내 범죄 발생 비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범죄와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불평등 증대는 포퓰리스트나 극단적 정치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증가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후보자들은 불평등 완화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도, 불평등, 특히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불평등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대선 토론에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2. 토론 논점과 쟁점

1) 경제 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소득 불평등 증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비롯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해 학력 간 노동소득 격차가 증가하기도 하고, 노동유연성 증가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또한 기업체 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인구구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나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는 동질혼이 소득불평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제도와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공

적 이전소득 증가는 가처분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이처럼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도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를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득불평등 악화의 근본 원인을 기업 간 기술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에 기인한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확대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근로자들의 노동소득이 낮은 것을 소득불평등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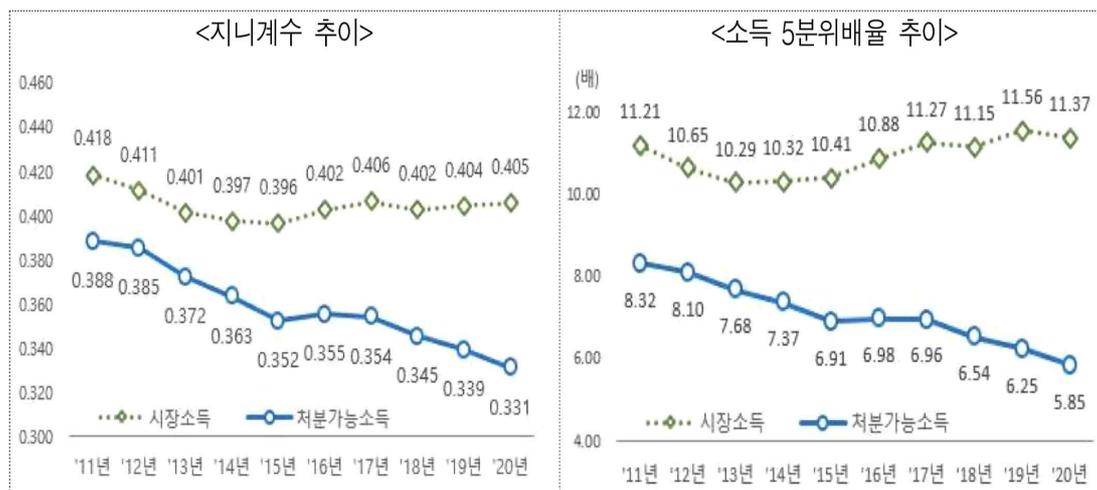
자산불평등 증가의 원인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 격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불평등이 부동산자산 불평등보다 더 높지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자산의 불평등이 자산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불평등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처방도 달라진다. 가령 문재인 정부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소득분배를 소득불평등의 주 원인으로 파악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이재명 후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대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소득을 올리고, 기존 복지의 확대와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정책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을 높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 한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득불평등 악화의 근본 원인을 기업 간 기술과 생산성 격차의 확대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 한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층에 추가급여를 지급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3)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또한 소득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철학 차이, 정부 재원에 대한 평가도 정책 차이를 야기할 것이다.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인 20.0% 보다 훨씬 낮은 12.2%(2019년 기준)에 머무른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이고,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소득 불평등지수와 가처분소득 불평등지수의 추이도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지수 모두 1990년 중반이후 크게 상승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다르게 움직였다. ‘시장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가처분소득 불평등지수’는 2010년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 가처분소득 불평등 지수는 더욱 급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의 결과로서 여겨지고 있다.



출처: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공적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의 도입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장하지만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고,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일컫는다. 한국의 경우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고용안전성과 근로조건을 유지한다. 반면, 2차 노동시장은 훨씬 열악한 고용안전성과 근로조건을 맞이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가령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노동시장의 근속연수가 13.7년으로 노장2차 노동시장의 근속연수 2.3년에 비해 약 6배가 길고, 월평균 임금도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불평등 악화에 따른 기회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득불평등의 급속한 악화와 함께 기회불평등 또한 악화되어 왔다. 부모소득의 상승이 자녀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더욱 증가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증가하였고, 세대 간 소득계층이동도 더 어려워졌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기회가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교육 기회불평등도 증가하였다. 이는 공정과 정의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소득과 교육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

▶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두 후보 모두 여러 복지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필요한 재정규모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후보들에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
토론 의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해소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검토
토론 질문	Q.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하여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37.3%, 영업이익 비중은 25%에 불과합니다. 양극화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투자의 차이로도 이어지는데, 대기업 노동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3.3배이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중소기업의 3.7배라고 합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59.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투자, 임금 격차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불평등 증대라는 중요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둘 간의 상생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배경과 이유

196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한국 경제정책의 기본 전략은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성장이었다. 특정 부문의 산업을 먼저 육성하고 그로부터의 성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성장전략을 택하면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면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게 되었고, 경제규모에서도 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전략 결과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된 사업구조가 고착되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약 688만개,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1744만 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3%를 차지하여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37.3%, 영업이익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반면, 대기업은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총 매출액의 47.4%, 총 영업이익의 57.3%를 차지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

산성과 투자의 차이로도 이어지는데 대기업 노동자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3.3배이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중소기업의 3.7배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노동자들 간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지난 2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율은 1999년 71.7%에서 2019년 59.4%로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각각 88.7%, 88.1%, 72.8%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생산성 정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및 투자 격차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두 당면과제와 직결되어있는 이슈라 볼 수 있다.

2. 토론 논점과 쟁점

1)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현 경제력 집중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따르면 재벌 대기업, 특히 4대 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성장의 부진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재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와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대기업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는 다른 기업들의 진입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로 하청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가격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이다. 이는 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쪽은 ‘재벌 개혁’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간주한다. 기업 생태계가 변화하여 대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국제 투자 자본이 기업의 소유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과도한 규제는 투자를 위축시킨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둘 간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능력 차이, 즉 규모의 경제, 경영 효율화, 소비시장 접근권 등에서 대기업이 우위를 누리는데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협업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기술환경 변화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은 현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존한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 비슷하게 전자의 견해와 가까운 반면,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후자에 가까운 것도 판단된다.

2)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과 조정권을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 기간 단축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기업이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과 구조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경쟁력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나 징벌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을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계속 부여하여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중견기업으로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것도 약속하였다. 기업 자율에 더 의존하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과 명확하게 대비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익공유를 기업에 강요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여 이익공유를 유도하려는 제도로써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협력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익공유제 찬성론자들은 이익공유제는 이미 다양한 기업이나 산업이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이익공유를 법제화할 경우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데 좋은 제도로 주장하고 있다.

▶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은?

과거 대선에서는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가 후보들의 핵심공약으로 강조되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재벌 개혁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재벌개혁은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들의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은?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토론 의도	후보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인식과 입장 검토
토론 질문	Q.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인들과 소통하고, 여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자와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급증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각 후보자께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되는지, 규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배경과 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급자/생산자와 이용자/소비자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면서 공급자와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인들과 소식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올리고, 여러 물건을 구입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도 함께 급증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온라인플랫폼의 매출액이 약 60조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세계 전체 기업 매출의 30%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위 안에 이미 6~7개의 플랫폼 기업이 항상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사업자들의 74%는 2020년 연 매출 중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했다. 플랫폼 기업은 급성장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금융감독원 공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58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78개 계열사에서 두 배로

늘어난 숫자이다. 또한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인 구글은 2020년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약6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벌어들이며 대략 6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은 약 1조9천억원의 매출액으로 21%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참여연대가 잘 설명하고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은 2개 이상의 소비자 집단과 이용사업자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비자, 이용사업자 모두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플랫폼의 가치는 증가하여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기업이 자체 생태계를 조성하여 이용자의 플랫폼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 이용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락인(lock-in) 효과는 플랫폼 산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 효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되고, 시장에서 승자독식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플랫폼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제품 가격 결정 과정에 간섭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규제 체계와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특정 플랫폼 기업과 그 자회사들이 시장 생태계 전반을 독식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보면 과반수의 이용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방식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가령 미국 하원은 4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려는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였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기조에 동참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22년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법률의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이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밝혔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도 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아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 토론 논점과 쟁점

1)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입장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또는 독과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부정적 시각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경우 독과점 현상을 초래하여 경쟁기업과 신생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여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게 된다. 시장을 장악한 후 수수료나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긍정적 입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기존 기업들의 독과점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본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입자이다. 과거 전통 산업의 독점에 비해 독점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막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거나 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계생산비용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게 내버려둘 때 소비자들의 후생도 극대화 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라는 명목 하에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입장

규제의 대상, 정도,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6000억 달러, 월간 활성 이용자수 5000만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만을 대상으로 강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논의되는 규제법안은 훨씬 더 많은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젊은 스타트업까지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획일적 규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하여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규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들이 진입장벽을 세우고 높은 가격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경쟁을 높이고,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산업별 특성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획일적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존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해 플랫폼 시장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비차별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전행위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사례별, 행위별로 사후적으로 규제하느냐에 대한 고민이다. 사후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의 혁신이나 플랫폼 사업모델 진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후규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세계적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도 고려할 문제다. 세계적 플랫폼 기업에 비해 사업 규모와 역량이 한참 모자란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에게 강한 규제를 부과할 경우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높으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정치권이나 직능단체의 플랫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직 관련 플랫폼들에 대한 기존 직능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이

강하다. 가령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은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외치며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와 강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관련 플랫폼과 직능단체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는가?

- ▶ ‘타다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 ▶ 많은 조직들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고객과 노무제공자가 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4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증대
토론 의도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입장과 정책 대안 파악
토론 질문	Q. 과거 증시 활황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1000만명 규모로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후보님들도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위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정책 방안에서는 각 후보마다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요구되는지 설명해주시죠.

1. 의제 선정 배경과 이유

기존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대선의 경우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규제 강화, 금산분리, 지주회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규제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후보들의 핵심공약에서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신 후보들은 소액주주 보호와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중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인주식투자자 수가 증가하면서 천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 관련 이슈들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투명성 증대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켰다. 여러 회사들이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갬 뒤 다시 상장하는 물적분할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해 기존 주주들의 분노를 야기하였다. 또한 공모도 차입기간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를 차별하는 제도 또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이는 또한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강조와도 관련이 있다. ESG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환경과 사회를 중요시하기는 어려우므

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수일가나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 기업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 내 불공정·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비슷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 문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간주하는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투명성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이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토론 논점과 쟁점

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차이점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지배구조를 빼놓고 거론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요 원인은 결국 한국 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2020년 기업지배 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2.9점으로 12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9위에 불과하고, 2016년, 2018년의 평가에서도 같은 순위를 받았다.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배주주나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전횡, 지배주주의 불법적 행위에 눈감고 있는 기업 이사회, 불·편법을 동원한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은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다른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전횡과 사익편취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불법적 행위를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식시장 개선에 대한 후보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주주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사가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도 위하도록 충실의무를 확

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개인투자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 매매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내부자의 지분 매도의 기간과 한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제한할 것도 약속하였다.

2) 물적 분할과 공매도에 대한 정책 유사점

후보들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이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가 상장회사들이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을 통해 분리한 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이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대주주의 자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배분 받지 못하고 기존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회사 상장 때 신주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윤석열 후보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고 제시하였다.

또 다른 뜨거운 이슈인 공매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공매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프로그램매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제안하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관에 비해 높게 설정된 개인투자자의 담보비율을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3)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은?

두 후보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주안점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우량주 중심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주식의 장기보유 시 양도세 인센티브를 약속하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폐지로 포함되어 이재명 후보 측

은 재벌 총수 등을 위한 ‘부자 감세’이자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논쟁이기에 후보들의 토론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 불법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 내부고발자 포상금 확대, 경영진의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약속하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처벌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후보들에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많은 공약이나 정책 제안은 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과연 선거 후에 재계의 반발을 넘어서 입법이 가능한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 ▶ 최근 ESG에 대한 강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경영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재벌 3·4세로의 지배권·경영권 승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개혁
토론 의제 5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 의도	저성장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이해 정도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파악
토론 질문	Q.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였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8.6%, 1990년대 6.7%, 2000년대 4.6%, 2010년대 3%대 초반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하락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가 큼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는데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어떤 경제정책을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제 선정 배경과 이유

한국경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5.5%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겪었으나 이후 연평균 2% 남짓의 낮은 성장률을 경험하였다. 게다가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였지만, 이후 1980년대에는 8.6%, 1990년대 6.7%, 2000년대 4.6%, 2010년대 3%대 초반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장기성장률 추이는 잠재성장률 추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장기적인 증가율과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한국 경제는 제로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전망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OECD 보고서는 한국의 2030~2060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0.8%로 OECD 평균인 1.1%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 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겪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장률의 지속적 감소로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에 걸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득불평등 문제도 더욱 악화된다. 또한 성장 감소의 위기로 부도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실물위기 위험이 커지면 이는 다시 은행대출의 부실화를 유발해 결국 금융위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으로 잠재성장률의 결정요인인 노동인구 공급 둔화,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본축적 저하,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지적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은 하락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고, 투자의 부진으로 자본축적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자본 생산요소 이외에 기술 개발, 법·제도, 경영 혁신, 노사 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까지 감안하여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총요소생산성의 부진이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많다. 일시적 경기 부양책은 연간 성장률만을 높여줄 뿐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2. 토론 논점과 쟁점

1)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증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투입량을 높이거나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법과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 경제 시스템 전체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생산요소 투입량 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경제 시스템 내 비효율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주장이 많다. 한국경제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2)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효율성을 증대할 것인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규제의 개혁이 요구된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제거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결국 혁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후보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3) 서비스 산업 생산성 증대 방법은? 생산성 증대와 관련해 또 중요한 이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보다 서비스산업 위주의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졌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비중은 높지만 생산성이 훨씬 더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의 구조적인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4)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을 높여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 지식, 기술 숙련도,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생산성은 증대하고, 경제성장률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의 비결도 많은 부분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도 많다. 따라서 국가는 인적자본 축적을 돕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인적자본 형성과 4차 산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키워야 한다. 후보들이 이러한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장기적 정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지속적인 출생율 하락은 한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 고질적 저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방안을 지니고 있는가?
-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령인구 비율도 급증하였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1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
토론 의도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과 우선순위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토론 질문	Q.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국내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회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4차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4차산업혁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과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로봇, 디지털,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혁신과 이와 함께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제기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고용과 노동 전반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에 기반을 둔 신(新)성장산업들은 혁신적 사고와 투자를 통해 각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이러한 분야의 첨단사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국내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향후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4차 산업혁명의 모멘텀

한국경제는 2010년 이후 매년 2~3%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11월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OECD는 큰 변동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4차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4차 산업혁명에서 민관 협력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가 주도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과정에서는 국가의 역할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에 적합한 지식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민간 부분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무직, 판매직 등 중숙련 (middle-skill)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숙련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숙련 일자리의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는 비관적 예측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구조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자동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형태의 ‘러다이트’운동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추가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2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토론 의도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본다.
토론 질문	Q. 최근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벤처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서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벤처업계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아동보호·기존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최근 제2의 벤처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벤처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인 7조 6,80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상당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은 혁신적 사고와 기업가적 정신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지원, 고용지원, 시장진출 지원, 물류유통 관련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과 대기업과의 경제력 불균형 심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직면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과 함께 물론 인력난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방안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핵심 주역으로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다른 나라들 역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정부 지원을 늘리는 양적 경쟁이 아니라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직접적 자금지원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간접적인 창업 기회 제공에 집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각이 갈리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산업의 특성상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규제혁신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에 막혀 혁신적인 사고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적 사고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현재와 같이 허용한 일만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금지한 것이 아니면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규제를 해제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났던 사건이 ‘타다’와 관련된 논란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운수 플랫폼 영업은 대폭 제한되었다. 한쪽에서는 전통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폐습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추가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스타트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는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작년 12월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법인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이 통과에 반대하였다. 벤처기업 창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다보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게 되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지므로 힘들게 일군 기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부투자를 꺼리게 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된다.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를 쉽게 하여 투자를 활

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지배주주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게 되며 재벌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오래전부터 차등의결권을 요구해온 다른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3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토론 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파악해보고 이를 뛰어넘을 혁신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토론 질문	Q. 그동안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체감할만한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년층은 구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후보들께서 내세우는 정책이 기존의 정책들과 크게 구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그동안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제시되어 왔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서 청년층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로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및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다양한 청년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 역시 상당하다. 여성과 고령층을 포함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15.9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늘어났고 금년도 예산에는 31.3조 원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청년과 여성 고용이나 경제활동 참여인구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구직자가 체감할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청년실업률 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 9.8%에서 2020년 9.0%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 2021년 7.8%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을 뿐이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혹은 중간과 지방정부 간 프로그램의 유사·중복에 대한 문제도 오랫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기존의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일자리 이슈는 이번 대선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요 후보들도 이에 대한 공약을 다수 발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산업 투자를 통해서 300만 개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지역일자리 창출, 돌봄·안전 등 공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R&D 지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선도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미래 먹거리 창출, 대·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의무 고용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일자리 보장제, 기후변화 관련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약의 상당수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을 조금 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IMF 금융위기 이후 쏟아져 나온 다양한 일자리 대책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대책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역으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해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합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직자도 어려움을 겪지만 동시에 기업들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mismatch)는 주로 운수업, 제조업, 창고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미충원 상태로 미충원율은 14.2%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역으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다. 고등교육 졸업자가 높아진 등 상대적으로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 지방의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것, 기업이 원하는 숙련을 익힐 유인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가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각 후보들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4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뉴딜
토론 의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경제성, 자원마련, 지대추구 등의 이슈를 토론해보도록 한다.
토론 질문	Q. 화석에너지 사용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림훼손이나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가 더 중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온실가스 제거로 상쇄하여 순배출량 0(net-zero, 넷제로)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서명국들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수력, 풍력, 폐기물 등의 다양한 에너지를 포괄한다.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발전량 기준 당시 6% 대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하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0년 686만 toe에서 2015년에 1,329만 toe, 2018년에는 1,784만toe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조성과 세계 지원 등 저탄소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수치적 목표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신재생에너지로 전환과정의 경제성과 비용부담

화석에너지 사용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리적인 조건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야간이나 구름이 끼었을 때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신재생 발전시설을 설치할 부지도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앙일보는 작년 8월 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달성하려면 96조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혹은 세목(稅目) 신설 등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이 아직 자생력과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을 무시한 과도한 투자가 일부 집단의 지대추구로 귀결되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엄격한 경제성을 추구한다면 아직은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 사업의 상당수가 기각될 것이다.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견제하면서 사업의 경제성을 증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탈원전정책

에너지 문제에서 논쟁적인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을 중심에 두겠다고 주장한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 원전분야를 활용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전력수급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탈원전보다는 감(減)원전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건설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어장이 파괴되고 소음공해가 일어나 현지 주민들과 갈등이 벌어지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목표 채우기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산림이 훼손되거나 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경우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생태축을 단절시키는 등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 또한, 소음피해와 주거환경 침해, 화재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경제성장 및 일자리
토론 의제 5	노동권 및 노동시간
토론 의도	후보자들의 각기 다른 노동개혁의 비전을 염두해두면서 노동시장과 노동권의 문제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토론 질문	Q.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이나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이고 사회적 안전망 역시 충분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연공서열제 등 정규직 고용구조의 경직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정책의 주요한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노동은 소득창출의 근원이면서 삶의 보람을 찾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영역이다. 노동권 보호 수준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규제의 문제는 대선공약에서 매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특히 최근 들어 플랫폼 노동 등 노동의 형태와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노동개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였다. 특히 2018년 7월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고 2020년 1월에는 50인~300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직장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긴 편이다.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8.4%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¹⁾

1) 국가지표체계 중 비정규직근로자비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 (검색일 2022년 1월 30일)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노동시간 규제

노동규제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근로시간을 제도적으로 단축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 및 개인 생활의 조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여유시간이 증가하여 레저, 관광, 스포츠 활동에 더욱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확대되는 경제적 파생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과 유사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 등 사정이 모두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52시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후보 역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자는 견해다. 즉, 연평균 주 52시간제로 바꾸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2) 비정규직 보호방안

비정규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직접고용의 경우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공약하였다. 윤석열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좁히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일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일정비율 초과 사용하는 기업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총량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3) 연공급제 개혁

한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연공서열제의 문제는 여러 다른 이슈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존재한다. 연차가 높아지면서 급여가 상승하는 비율이 높은 급여 제도를 연공급제라 부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서 30년 차의 임금과 최초 입사 당시의 임금과의 비율을 마하는 임금 배율을 조사하였는데 서유럽의 경우 1.7배, 일본은 2.5배였고 한국은 3.3배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공급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충돌하며 임금에 비해 낮은 생산성의 고년차 근로자의 몫을 매우기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규제나 비정규직 규제에 앞서 근본적으로 연공서열제에 대한 개혁이 요청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최근 들어 다양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최근 들어 다양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공약하였다. 또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둘째, 최근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중인 제도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기업경영이 강성노조에 휘둘러 합리적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며 미국식 시스템에 가까운 우리의 기업지배구조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1	부동산 안정
토론 의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토론 질문	Q. 지난 몇 년간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젊은 세대에서는 코인이나 주식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위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 주거 안정은 모든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조건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하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KB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전국, 월간)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95.9에서 2021년 4월 114로 18.95%가 상승하였다. 아파트의 경우로 제한하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같은 기간 1,255만 원에서 1,887만 원으로 50%나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면서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및 과세를 적극 활용해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임대 등의 거래에 관한 세제(거래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출규제나 전매 제한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규제 및 과세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바 이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높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과 처방

우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각 정치진영의 시각의

차이가 크다. 일부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므로 대출 규제나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심지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것이 1차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급증가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다.

2) 주거안정 방안

둘째,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신도시 및 주택공급 계획,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등 주거공급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각 후보들은 신규주택 공급 방법과 형태에 대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택마련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여의찮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또,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심지에 신규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재건축이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의 가격상승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재건축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3) 부동산 과세

셋째,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경우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과세표준의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며 크게 인상된 바 있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유세를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수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상당 기간 거래세를 낮추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지난 2020년 여름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가운데 규제를 더욱 강화해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택시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 되었으므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지난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를 도입한 소위 '임대차 3법'이 통과되어 주택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임대차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의 규정을 완화하여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의 예외규정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엄격히 하여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둘째, 최소한의 국민 주거 수준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의 질 개선에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현재 14㎡(4.2평)이며 그 밖에 방수기준, 설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5.3%로 추산된다. 그동안 주거의 질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 마련은 부족하였고 그 사이 주거품질 개선의 문제는 등한시되었다.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청년 및 빈곤층의 주거 질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도록 한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토론 의도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이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바 이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토론 질문	Q.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취약계층에 더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후보님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사회적 약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다. 소상공인층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프리랜서 업종은 공연과 같은 일감의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이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바 이를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코로나 지원 규모와 재원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다.

우선,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었으며 자영업 종사자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포인트 정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자영업자 손에 쥐는 지원금은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과도한 지원금은 자연스러운 사업조정 인센티브를 저해하며 방역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가의 재정에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올해 정부 예산 608조 원 중 68조 원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편성하였으며 이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다.

2) 코로나 지원 범위와 원칙

둘째, 누구에게 지원을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다 보니 방역조치와 무관한 위기업종인 여행업이나 공연업은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양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에 비해 피해업종 선정이 지나치게 단순하므로 여러 업종을 포괄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직접적이고 객관적 손실을 입은 소수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난지원’ 사이의 선택과도 관련되어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대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에 대한 부채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채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PPP)을 실시해 정부 대출금 중에서 점포의 고정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갚지 않도록 하여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으며 지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성실히 부채를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3	공적연금 운용 및 개혁
토론 의도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미 몇 차례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여전히 재정고갈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근로세대의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토론 질문	Q.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금고갈의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더 많은 부담을 뒷세대로 넘기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복되는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신뢰성을 손상하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지난 1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하여 국민연금이 2055년에 소진되므로 그 시점에서 만 65세에 도달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 2018년 재정 전망 때보다 고갈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졌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표현은 상당히 과장되었으나 연금개혁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등 직역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심각한 노령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원마련, 급여율, 수혜자의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미 몇 차례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여전히 재정고갈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향후 근로세대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고갈대비를 위한 모수적 개혁(더 내고 덜 받기)이 일차적으로 주요한 논의지점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은 이미 몇 차례 개혁이 단행되었으나 여전히 재정고갈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향후 근로세대의 부양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 및 급여액 삭감과 함께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조정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연금고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잦은 급여삭감은 공적 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상실을 가져오며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자체의 역할에 위배되는 성격도 있다고 주장도 존재한다. 특히 지금 고갈을 막기 위한 매우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한다면 현재의 2~30대가 짊어질 부담이 너무나 커지게 된다. 현재의 퇴직세대가 매우 관대한 연금혜택을 누린 점을 고려하면 이는 세대간 공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심각한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면서 특정 세대에 지나친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정부의 채권발행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공적연금간 통합여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공적연금간 통합여부가 쟁점이다. 최근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간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2021년 공무원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239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약 55만원)의 4배가 넘고 매년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보조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통합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18%로 국민연금(9%)에 비해 기여율이 높고 납입기간도 길며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평면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2016년 박근혜 정부하의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률 즉, 납부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은 이미 국민연금에 비해 낮아진 상황이다.²⁾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이 더

2) 서울신문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높다” 2021/10/13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14012003> (검색일 2022년 1월 30일)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삭감되는데 이에 대한 노인층의 불만이 높지만 무작정 이를 폐지하기에는 미래세대의 부담도 만만찮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연금수급자가 매달 254만 원(2021년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인층의 불만은 매우 크다.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다르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 복지제도이므로 이러한 삭감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은 가장 관대한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인데 감액제도까지 폐지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급속히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4	가계부채 문제
토론 의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조이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므로 이 가운데서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토론 질문	Q.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어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부채를 줄이기 위해 돈을 조이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11년 가계부채는 916조 원 규모였으나 2016년 1,342조 원, 2021년 3/4분기에는 1,845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2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 확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대출을 통한 공모주 등 주식투자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계부채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별 이행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올해 7월부터는 개인별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대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올 7월부터는 개인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조이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므로 이 가운데서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부채를 통해 위기국면을 연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금리인상 역시 예고된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역시 자본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어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면 서민들은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의 어려움도 덜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부동산 대출을 조이다 보니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이와 연결되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경제 분야	
세부 분야	민생
토론 의제 5	재정건전성 및 조세
토론 의도	증대되는 사회복지 및 인프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 혹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토론 질문	Q.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응당 필요한 조치이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세 등을 포함하여 국가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최근 코로나 19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정부는 607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더해 지난 1월 14조 규모의 추경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국가채무는 2015년 592조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 847조 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1,338조 원에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자주 이용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15년 35.7%에서 2020년 44%로 크게 늘어났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정부 재정지출 규모

정부의 재정기조나 과도한 부채규모 자체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재정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적절한 혹은 허용가능한 국가부채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쟁이 진행중이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부채의 축적은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위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고령화·저출산이 가져올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또한, 지금 발생하는 막대한 정부부채는 이후 세대의 짐이 되므로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아직은 국가재정 여력이 튼튼하며 부채의 비중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히려 더욱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성급한 긴축재정은 실물경제에 충격을 가져와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 증세 여부와 증세 영역

증대되는 사회복지 및 인프라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 혹은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바 이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나타내는 주된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0%에서 2019년 20.0%로 증가하였다.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9년 24.9%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증세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³⁾ 그러나 증세는 소비와 투자 등 경제적 활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또한, 조세의 양적 수준이 아닌 조세수입 항목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조세 중 어떠한 항목의 비중이 높아지느냐는 경제의 활력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어떠한 집단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가 하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조세항목들 사이의 구성 역시 중요한 논점이 된다. 즉,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인지 소득세 부담을 높일 것인지 등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조세부담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3)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검색일 2022년 1월 24일)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정부부채가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비율 등을 법제화하여 이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재정지출 관리와 관련되어 국가부채비율 관리나 통합재정수지관리 등 국가재정에 대해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 두고 이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도입할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인과 관료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되므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위기에 직면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국가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법제화된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를 추가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 분야 토론의제

사회 분야 주제	주제별 의제
I. 복지&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 저출생·고령화, 인구절벽 대책 ○ 아동 학대, 영아 살해 대책 ○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 및 간병인 처우 개선에 관한 후보의 태도와 정책 비전 파악 ○ 성폭력, 성범죄 대책 ○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방안
II. 환경&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위기 대책 (국가온실가스 감축) ○ 원전 정책에 관한 태도 ○ 미세먼지 저감 대책 ○ AI 및 빅데이터 활용 정책 ○ 디지털 격차·소외 계층 대책 ○ 우주 개발 육성 정책
III.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정책비전과 인재상 ○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정책 ○ 대입제도개선: 공정한 평가 그 이상을 향하여 ○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1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토론 의도	복지 정책의 범위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담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복지제도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방식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내부의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수준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개인에게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에서도 학계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등을 통해 지난 10년여 동안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주요한 선거 이슈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근 2019년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취업자가 급감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며 폐업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 사회 보장 체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팬데믹이 가하는 경제적·사회적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그 하한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소득 정책 취지에 관한 담론은 다시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정의에 따르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란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인 현금이전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①무조건성(unconditional), ②보편성(universal), ③개별성(individual), ④정기성(periodic), ⑤현금지급(cash payment)을 핵심 개념으로 한다 (BIEN 2022; 경기복지재단 2020).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지원금은, 자산조사나 근로능력을 증명하거나 구직의사와 관계 없이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 모든 사람에

계(universal) 지급되어야 하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individual) 지급되어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periodic)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바우처나 현물이 아닌 현금지급(cash payment)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핵심 특징은 기존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와의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사회정책들이 수혜자의 자산 조건이나 근로 조건 및 구직 의사, 사회 기여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기본소득 정책은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위기가 항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경제체제 하에서 일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의 장시간 노동과 함께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노출되게 된다. 그런데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존의 경제적 처방책들이 이제 별로 효과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다고 간주한다. 예컨대 일자리를 늘려 완전고용을 추구한다는 복지국가의 정책 목표는 저성장 및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신자유주의의 약속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노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론에 의하면 소득과 자산에 따른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넘어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태 위기가 극복할 수 있는 방도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

기본소득 정책은 현 경제체제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므로,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대통령 후보자의 태도를 묻는 것은 경제적 위기에 관한 진단과 함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역할란 무엇이고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그의 이념적 가치관을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최근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복지 담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는 복지제도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중 어떤 방식

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후보마다 복지제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 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네 명의 후보들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 서로 다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후보자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기본소득 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 왔으며, 2015년 10월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 정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12만 5천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들에게 지급되었던 바가 있다. 이후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을 줄곧 강조해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2023년부터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경향신문 2022a).

다음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기본소득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산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윤 후보자는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하여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를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조선일보 2021a), 부모급여 월 10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 등 현금 지원성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조선일보 2022a).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을 모두 “포퓰리즘”, “망국병”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국가예산에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세금과 정부 재정 일부를 구조조정해 매년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두 양대 정당 후보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조선일보 2022a).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자는 현행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 빈곤해소 소득보장으로서, “시민평생소득”이란 이름으로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심 후보자는 시민평생소득에 대해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해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 설명했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만 지급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차별점을 두었다 (한겨레 2021a).

따라서 이와 같이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관하여 후보마다 서로 다른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또는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이재명 후보 또는 심상정 후보자에게: 보편적 복지 정책에 찬성한다면,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또한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 정책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윤석열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자에게: 선별주의 복지 정책을 추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복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지?

한편,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일단 동의할지라도 이 정책에 드는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현실적 차원의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 즉, 보편주의 복지를 현실화하고자 할 때, 기존 세입을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세 감면 영역을 축소하여 마련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재원 마련의 방법론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주의 복지 정책을 실천하려고 할 때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 후보의 정책 구상과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별주의적 복지 정책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과연 어떤 기준(소득 혹은 자산, 취업 여부 등)으로 복지 대상자를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실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2	저출생·고령화, 인구절벽 대책
토론 의도	최근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적 비전은 무엇인지 의견 파악
토론 질문	Q.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며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사회입니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청년 세대의 의식 변화에 따른 불가역적인 결과라면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최근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지표)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등으로 꼴찌이다. 2019년 1.3명에서 192위였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꼴찌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최하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0세~14세 연령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은 12.3%를 기록하여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12.3%라는 수치는 25.3%인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6%로 2020년에 비해 0.8%p 증가하였고, 이 수치는 세계 평균 9.6%에 비해 훨씬 높다.⁴⁾ 이처럼 한국은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다(한겨레 2021b).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주된 요인으로서 학계에서 주로 거론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미혼과 만혼의 증가이다. 특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초혼 연령이 상승하였고, 늦어진 결혼으로 인해 출산율의 감소가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연령 인구인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의 감소도 최근의 급격한 출생아 수의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자녀 세대인 청년 인구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30대 후반에 진입하는 데 비해 그보다 인구가 적은

4) 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화사회”라고 정의하고, 14%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부른다(한겨레 2021b).

코호트들은 30대 초반에 진입하여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30대 초반의 부모 인구 자체의 풀(pool) 자체가 과거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지연 2017).

저출생과 고령화의 현상이 비단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며, OECD 선진국들도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현상이 대통령 선거 의제로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까닭은 한국의 경우에는 소위 “인구절벽”이라 불릴⁵⁾ 수준에서 인구 감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가파르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21b). 특히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결국 현실화되었다. 과거 10년간 주민등록 인구의 증가 폭이 줄어들었던 추세가 이어지던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중앙일보 2021a). 이러한 급격한 인구절벽은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미래 잠재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인구대책이 요구된다. 게다가 유례없이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경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의 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며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사회이다. 2020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의 수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도 현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청년 세대의 의식 변화에 따른 불가역적인 결과라면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YTN 2021a). 그러나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에 차이가 다소 존재하므로 토론을 통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유권자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알릴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여 대통령 후보자들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 및 돌

5)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조선일보 2021b).

봄노동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고, 소득수준과 관련 없는 6~12세에 대해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도 가정양육수당(만 0세~만 2세)을 월 3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산모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등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도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이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영아전용 어린이집을 신규 개설하며, 부모의 복직 시점에 입학이 가능한 육아휴직 연계용 어린이집을 도입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출산, 육아, 돌봄 휴가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성평등 돌봄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3배 늘리고, 남성도 3개월까지 무조건 육아휴직을 보장하여 여성에게 편중되는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가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절벽 현상은 단순히 육아와 돌봄의 영역을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인 문화적 트렌드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한 단기적인 육아와 돌봄 지원 정책 이외에 거시적인 시각에서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 국정운영 지도자로서 어떠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을 통해 입장과 해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절벽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이와 맞물려 사람들이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다. 예컨대 소위 MZ(1981~2010년생)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는, 소속된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개인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졌던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취향과 만족을 중시하며, 불호와 소신의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조직인 아닌 자기자신에게 맞는 방식의 삶을 스스로 발굴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관을 가졌다고 흔히 설명된다(DBR 201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인구절벽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양극화나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만으로 치환되지 않으며, 출산인구 중에서도 특히 2030세대 여성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거쳐서 취업이나 결혼을 하여 집안에서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던 기성 세대의 획일적인 정상가족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 인구가 이제 출산 가능 인구가 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 여성 인구의 의식 자체가 불가역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과연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에게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출산과 육아에 재정적 지원을 과감히 투입하여 인구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인구 감소 문제의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은 대규모의 이민자 수용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후보자의 이민자 수용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출산율의 감소세를 막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에서 인구 규모를 유지하면서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거의 모두 이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가속화 되는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으므로 한국도 불가피하게 이민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는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과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민문제에 관해 아직 한국 사회에서 뚜렷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 감소 현상의 해결책으로서 이민자 수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통령 후보자의 장기적 비전과 정책적 입장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3	아동 학대, 영아 살해 대책
토론 의도	아동 학대 및 영유아 살해 사건에 관한 후보의 심각성 인식 정도와 함께 정책적 방안에 대한 파악
토론 질문	Q.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학대 사건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하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등으로 여론에 응답하였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가의 대응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 2,61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만 2,853건이었고, 2019년에는 1만 4,484건, 2020년에는 1만 6,1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은 9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1만 9,582건으로, 이미 전년도인 2020년의 전체 신고 수치를 21.3% 상회하였다. 한편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받은 사례 수를 의미하는 검거 건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거 건수는 2017년 3,320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3,696건으로 늘어나고, 2019년에는 4,645건, 2020년에는 5551건까지 올랐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8,392건으로 급증했다(경향신문 2022b).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부모가 7,689명으로 전체의 83.6%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도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의 비율은 77.5%(4,780명)로 가장 높았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중 최근 한국 사회에서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은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2021년 10월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하며, 살인죄보다 형

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등으로 여론에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경찰의 아동학대 방지 및 현장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인권위에서도 권고를 조치했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살해 사건은 연달아 반복되고 있다(서울신문 2021a).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고립되었고,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해소함으로써 학대 사건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경향신문 2022b).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아동학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가의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동학대 및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가 연달아 계속됨에 따라 대통령 주요 후보자들도 이 문제를 의제화하여 공약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약속했고, 영아살해 및 유기죄는 폐지하고 보통살해 및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한다. 즉 처벌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이 나타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폭 증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아동학대 발굴 기능에 초점을 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와 달리 윤석열 후보는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대 정당 후보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대책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어떠한 정책이 더 효과적인지에 관하여 토론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법 제정·개정 이전에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학대에 대응하는 인프라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는 이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있다. 법 제정 및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를 신고하여 관련 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때 당국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과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구호의 신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동아일보 2021).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통령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4	노인 돌봄 및 간병인 관련 정책
토론 의도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 및 간병인 처우 개선에 관한 후보의 태도와 정책 비전 파악
토론 질문	Q.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을 위한 간병 인력은 부족하고 병상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이 부족하면 결국 돌봄 노동은 개인 또는 자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간병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 그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0년 통계청 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전체 인구의 15.7%(약 812만 5천 명)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서 학계 구분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이들 65세 생존자의 기대 여명은 20.8년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빈곤율은 43.8%로 OECD 가입국 중 1위이고 노인 4명 중 3명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고 2위 슬로베니아 38.7명과도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통계청 2020; 오마이뉴스 2021a).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2018)>에 의하면, 65세 노인의 21.1%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자살충동을 경험한 노인들 중 13.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한편, 각종 만성질환과 우울증 등에 취약해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자살을 고려한 적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27.7%는 생활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답했고, 근소한 차이로 27.6%가 본인의 건강 문제를 1순위로 언급했으며,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과 단절(18.6%) 문제가 뒤를 이었다. 요컨대 노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은 막혀 있고 건강은 악화되면서 자살 충동이 들게 된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부양과 돌봄 및 간병 노동은 각 가정 내에서 구성원, 특히 며느리나 딸과 같은 여성의 몫으로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과거 전통 사회와 달리 현대인들은 이제 대가족을 구성하여 살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면서 가정 내 노인 부양과 돌봄의 역할에는 큰 사회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출생률의 저하와 함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동을 고려했을 때, 간병 돌봄의 직·간접적 대상자가 되는 일은 누구에게든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인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현재보다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노인 돌봄 서비스의 간병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또 그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노인을 위한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쳤고, 공공병원도 96개 중 85개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병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노인을 상대할 간호사 및 간병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데 비해 간호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훨씬 높다는 실태조사가 있다(경향신문 2021a).

공공기관에서 전문 간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안은 각 가정에서 24시간 노인을 돌보아야 하는 다른 가족이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사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전문 간병인의 도움 없이 노인을 직접 돌본다고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은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빚을 내 사설 간병인을 고용

하다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되거나(간병파산), 노인의 죽음을 방치하는 파국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아버지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 사건(일명 강도영 사건)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문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유급 간병인을 고용할 때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해 2008년 3조 6,550억 원에서 2018년 8조 240억 원으로 늘었다. 사적 간병 수요는 연인원 기준으로 같은 기간 5,773만 7,000명에서 8,943만 8,000명으로 늘어났다. 유급 간병인의 일 평균 임금은 2008년 5만 1,728원에서 10년 후 7만 3,334원으로 뛰었다(이진선·김진현 2021; 경향신문 2021a). 요컨대 간병인 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공급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간호인과 간병인 인력 충원이 시급하고, 이들이 직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제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 들어 볼 필요가 있고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하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현재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 한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들이 나이의 증가를 이유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쉽게 고립되지 않고 계속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 그래서 아직 활동에 무리가 없이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부양의 대상으로만 이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노인 인구의 일자리 창출과 노인 대상 복지정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병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5	성폭력, 성범죄 대책
토론 의도	성폭력 및 성범죄에 관한 후보의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적 방안 파악함.
토론 질문	Q. 최근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성범죄 실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 수준이라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여성가족부의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1년 대비 8.2배 늘어났고, 불법촬영 검거 인원은 5,151명(남성이 94.1%)에 달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은 9,858건에 이르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유명 연예인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건, 화장실 몰카 및 변형 카메라 유통 문제 등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및 성범죄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불법 촬영 관련 사건이 4% 미만이었지만, 2017년에는 그러한 사건의 수가 585건에서 6,615건으로 11배 증가하면서 전체 성범죄 사건의 20%를 차지했다(휴먼라이츠워치 2021).

하지만 한국의 형사소송 체계는 성폭력 및 성범죄에 대응할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비교적 쉽게 행해지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는 대체로 혐의자가 조사를 받고 일단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검찰로 이관된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이 중 상당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2019년에 검찰은 성범죄 사건의 46.8%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비해 살인 사건의 불기소율은 27.7%, 강도 사건은 19%였다. 몰래카메라, 촬영물의 무단 유포, 아동 및 청소년 성착

취물 제작 및 유통으로 한정된 성폭력 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43.5%에 달했다(휴먼라이트워치 2021).”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체로 형량이 가볍고 징역형을 면한다. 2017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체포된 가해자 5,437명 중 단 2%(119명)만이 징역형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과 의무 수강명령 등으로 해결된다(휴먼라이트 워치 2021).”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대책과 사법적 제재는 물론 사전 예방책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토론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최근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의 확산을 막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후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및 성범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는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들어 폭증하는 성폭력 및 성범죄 현상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양대 정당 간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통신사업자의 방조에 힘입어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던 엔번방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하여,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는 등으로 대응하였고, 권력형 성범죄(미투)에 대해서도 무고죄 처벌 강화로 거짓말범죄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한국일보 2021a).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고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 폐지하겠다”고 적어 정부를 비판하였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착취영상물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범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의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독립물수제’를 도입하도록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 등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신문 2022).

이에 따라 대통령 후보로서 성폭력 및 성범죄 현실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토론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성차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폐지 또는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0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가부는 폐지하겠지만 기능은 이관하겠다는 절충안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6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여가부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으나 이에 관한 뚜렷한 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 후보가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자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글을 남겨 뚜렷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으며,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

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특별히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범죄 문제를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관해 각 대선 후보자들이 향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	
세부 분야	복지와 여성
토론 의제 6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방안
토론 의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 노동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는 저출산 위기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한 후보자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토론 질문	Q.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 매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일터에서 경력의 단절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실까요?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한국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합계 출산율)는 1.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저조한 출산율에 대해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 여성이 출산하게 될 경우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거 전통사회와 달리 근대화가 달성된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남성들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여성이 출산을 겪게 되면 최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전까지 결국 경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경력 단절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상당히 커진다. 여성의 경력과 재취업의 일자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쟁적인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쉽게 출산과 육아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터와 가정의 생활이 양립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출산 후 복귀 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이 그러한 정책들의 예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직군이나 직종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일반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노동자가 이러한 복지 제도를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아직까지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성이 경력 공백에

관한 우려를 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실효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의 대응책도 필요하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터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여성의 커리어를 보장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자동등록제”를 공약하고, 돌봄정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 후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동 육아 휴직제 표준서식을 배포하는 등 제도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정이 간소화되고 기업의 인력계획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가정양육수당을 월 30만원으로 늘리고,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대략 3년의 시간을 보육기간으로 가질 수 있도록 공약하였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 이상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육아정책연구소 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영아 1인당 양육 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합치면 50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일과 양육이 병행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저출생 예산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했다. 저출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렸기 때문”이라며 “1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 내걸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아빠가 무조건 3

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제화하고 육아휴직 초기 3개월에 월 150만원 한도로 대체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을 향후 최소 1년 동안 월 28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이다.

이와 같이 주요 대선 후보들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 어떤 정책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고용 확대, 장시간 근로 개선,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이 제도로 인해 정규직의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질 낮은 일자리에 여성 노동자가 고착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각 후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토론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1	기후 위기 대책 (국가온실가스 감축)
토론 의도	기후위기에 관한 국제 사회 노력에 관하여 어떤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후보의 의견 파악
토론 질문	Q. 세계 각국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당사국총회(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후보는 찬성하십니까? 찬성 또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최근 미국 서부와 터키, 독일, 그리스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과 폭염, 폭설, 폭우와 홍수 등의 기상 이변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1.09℃ 올랐으며, 지난 2백만 년 넘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처럼 높은 적은 없었다.” 또한, “지표면 온도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지난 5년간 기온은 18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IPCC 보고서는 “1.5℃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극심한 폭염과 가뭄, 폭우, 홍수 등 기상관측 사상 전례 없는 기상 이변 현상들이 증가할 것이며, 2℃ 상승 시 그 강도가 최소 2배, 3℃ 상승 시에는 4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는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고에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와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하겠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 14.5%, 건물 부문 32.8%, 수송 부문 37.8%, 농축수산 부문 27.1%, 폐기물 부문 46.8%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외 흡수원 보전복원과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도입, 국외감축 사업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동아사이언스 2021).

이와 같이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외교적인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그린피스 2021).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세계 각국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당사국총회(COP26)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제출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후보는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찬성 또는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탄소중립은 2050년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과 엔디시의 이행과 점검을 총괄하며 핵심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되, 현 정부가 짜놓은 감축 시나리오는 받지 않는다.”고 하여 감축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생략했다.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엔디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에 폐쇄하면 (2010년 대비 5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3억2800톤의 62%인 2억400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탄소중립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산업계에서도 불가능하며 무리한 수치로 판단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35%, 신재생에너지 35%,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 믹스(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 후보자들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후보마다 대응 전략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어떤 정책이 더 실효적인지에 관하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다른 산업 분야보다 농업, 어업, 산림업 등은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받는 분야이다. 한편 농어촌은 젊은 인구가 계속 이탈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농민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 ▶ 소멸과 기후변화라는 농어촌이 직면한 이중의 위협에 대하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정부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2	원전 정책에 관한 태도
토론 의도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비전과 주장을 파악
토론 질문	Q. 원자력 에너지 기술에 회의적이었던 선진국들이 전력난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원전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반면,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복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전을 감축 혹은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후보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32개국이다. 이중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스위스·벨기에 등이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29%였던 원전 발전 비율을 2030년 23.9%, 2050년 6~7%로 낮추고, 6.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 30.2%, 2050년 60~70%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등 원전 건설을 사실상 무효화했다. 올해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로 향후 추가 준공될 원전은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등 4기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2034년에는 17기로 줄인다고 밝혔다(매일경제 2021a).

하지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비판의 요지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만 고집하게 되면 전력난이 불가피하고, 세계 각국들은 오히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 1위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2990기를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원전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4400억달러(약 518조원)를 투입해 최고 150기 원자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5년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에 오를 전망이라고 논의된

다(매일경제 2021a).

한때 탈원전을 선언했던 프랑스도 전력 부족으로 에너지 위기에 처하자 최근 10억유로(약 1조4000억원)를 들여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섰다. 영국도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었지만 최근에는 2050년까지 약 45조원을 투자해 SMR 16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미국 또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조 바이든 정부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SMR 개발에 향후 7년간 32억달러(약 3조70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매일경제 2021a).

이와 같이 각 국가들이 원전 정책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일자,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원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도 탈원전 속도를 늦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해외 원전 수주와 SMR(소형모듈원자로 small modular reactor) 수출을 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원자력 에너지 기술에 회의적이었던 선진국들이 전력난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원전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최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반면,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복구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원전을 감축 혹은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후보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탈원전 이슈에 관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가 원전은 건설 안하는 게 맞다.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 기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찌감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적극 주장해 왔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행보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고, 이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며 “탈원전 정책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재생에너지로나 에너지 믹스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초격차 기술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전, 특히 중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또 수소 산업이다”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 부분을 더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가장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소형핵발전을 포함한 핵발전은 실용화되지 않거나 건설기간이 길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더이상 핵발전이나 재생에너지나 소모적인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선 후보자들마다 입장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토론을 통해 주장과 논거를 확인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전력생산 판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국내 전력시장은 아직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국전력의 판매 독점과 발전 통제로 특정 사업자에 불이익이 돌아가고 발전부문 등의 시장왜곡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해 시장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지금의 전력시장 구조는 에너지 신산업 등 변화하는 환경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방과 경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전력산업은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이므로 완전히 개방된 시장체제로 성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현 전력시장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에너지 경제 2020).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11월 한국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사실상 독점한 전력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EA는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에너지경제 2020).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간 개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 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3	미세먼지 저감 대책
토론 의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후보의 외교 비전과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외교적 노력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비전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정부의 강력한 대기 배출 규제에 의해 인해 후진국형 대기오염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던 대기의 질과 환경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의제로서 설정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9년 국민 700명과 환경 분야 전문가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선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으로 37.9%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대기 환경을 조성'을 택했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또한 정부가 우선시할 정책으로 미세먼지(37.3%)와 기후변화(23.7%) 정책을 1, 2위로 꼽았다(KBS 2020). 이와 같이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국가적 의제로서 관심사로 두고 있는 중요한 환경 이슈이다.

20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5년 사이에 감소세가 둔화되고 정체하거나 또는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미세먼지 생성에 관한 주요 원인들을 거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미세먼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기 정체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송창근 2021).

미세먼지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일국만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정운영 지도자의 장기적인 비전과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

지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외교 전략과 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외교적 노력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비전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중국 정부는 최근 전력난 해소를 이유로 발전용 석탄 생산을 늘렸고 중국에서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석탄 화력발전소가 담당한다. 중국이 석탄을 태워 화력으로 전력을 대량 발생시키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들어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떨어지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의 초미세먼지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약 30~35%로 추산한다. 베이징과 선양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12~30시간 뒤 서울도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식이다(서울신문 2021).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뚜렷한 외교적 대응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이 2018년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면피성 발언을 했음에도 한국의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대로 반박을 하지 않았고(중앙일보 2019),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필수 협의 대상인 중국과 2020년에 단 한 번도 관련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0).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중국을 상대로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견을 밝히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토론을 통해 각 후보자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소비자가 저공해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하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수소차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다. 가솔린과 디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1km를 달리는 동안 적게는 100g에서, 많게는 200g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기차가 작동하기 위한 전력의 생산에 또다시 석탄화력이 대부분 소비되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에서 당장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대체된다고 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 전기차가 효과가 있으려면 유럽과 같이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구조로 근본적인 전력생산의 구조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 2020).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후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을 통해 청취할 필요가 있다.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4	AI 및 빅데이터 활용 정책
토론 의도	AI·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을지에 관한 후보 입장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도 ICT 강국으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공공부문 중 특히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능에 해당하는 지각과 학습, 추론 등의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은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정형 및 비정형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분석 및 학습하여 판단이나 예측을 하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과 딥러닝(Deep Learning)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사회 전 영역에서 AI를 접목한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서비스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사회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컨대 치안 부문에서는 경찰청 데이터나 수사 결과 보고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범행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 범행에 자주 이용되는 도구 등과 같은 정보를 추출하여 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역 등을 예측해 시민들에게 미리 경고해 줄 수 있다. 또 의료 보건 분야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 창출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하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 공공부문에서 이와 같은 미래 기술을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최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ICT 강국으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형 플랫폼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2) 공공부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고 했을 때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지? 공공부문 중 특히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인지?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 변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현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들도 관련 이슈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5대 강국의 과정으로 4대 대전환(과학, 산업, 교육, 국토)과 2개 개혁(공공, 금융) 과제를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전환에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를 신설하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특화인재 100만명 양성, 마이데이터 산업 전분야 확산,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에 따른 일자리 200만개 창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하였고, 교육 전환에선 대학 교육과정과 지역대학 혁신, 온라인 교육 확대 구상을, 국토 전환에선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다양한 교통체계로 이어지는 도시 네트워크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메가시티를 조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전자신문 2022).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지능형 사회보장체계를 구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후보는 국민 개개인에 고유한 계정을 부여해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부여하는 포털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원사이트 토털서비스’),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청년 창업 스타트업, 관련 기업과 협업하겠다고 설명했으며, 독자 시스템을 개발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2022b).

이와 같이 양대 정당의 후보자들인 모두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공공부문 서비스 접목에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집권 시 현실화할 수 정책 방안인지에 관해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공공부문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5	디지털 격차·소외 계층 대책
토론 의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후보의 입장과 정책적 비전을 파악
토론 질문	Q.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일상의 각종 생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정보화로 인해 인터넷 사용은 이제 한국 사회의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활동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수행되던 작업이 비대면화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온라인 공간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원재료로 삼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산업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AI를 비롯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각종 행정 서비스도 트렌드를 맞추어 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배우지 못한 계층과 세대가 이러한 흐름 속에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이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필수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영상통화, 화상회의 등 일상의 각종 생활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는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후보는 이와 같은 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통신사회에서 데이터 접근권과 이용권은 이제 기본권의 영역으로 여겨질 정도로 생활의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소득층 가정과 노년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구비할 수 없거나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데이터 기본권”을 보장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이동통신사들이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KTX 예매 등 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에서는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가치로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시민 권리 보장 등을 제시한다. 또 디지털 전환 4가지 원칙으로 그린 디지털, 공존 디지털, 디지털 민주화, 연구개발 강화 등을 밝히면서, 탈 탄소를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자원낭비를 줄이고,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IT 노동자의 불안정한 희생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지디넷 2021).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 각 대통령 후보자들이 디지털 소외 계층에 관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디지털 소외 계층은 주로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 도서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디지털 소외와 격차를 해소한다고 할 때 지원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회 분야	
세부 분야	환경과 과학
토론 의제 6	우주 개발 육성 정책
토론 의도	대통령 후보의 우주 개발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성 파악
토론 질문	Q. 우주산업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국가 간 산업 개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주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고 거시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최근 미국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개발업체 블루오리진이나 리처드 브랜슨이 회장인 버진 그룹의 버진갤러틱과 같은 민간인의 우주비행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유인 우주비행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8차례가 모두 민간인 우주비행이었다.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엑스를 만들어 화성 탐사선용 로켓, 스타십을 개발하고 있다(조선일보 2021).

이렇게 민간인 우주비행의 시대가 열리고 우주 탐사 작업을 위한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통신, 달 자원 탐사 및 채굴 분야의 산업은 향후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우주 산업계 육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내 전담 TF를 구성해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 예컨대 우주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개방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우주 산업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한국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어떠한 비전과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1) 우주산업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 국가 간 산업 개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우주산업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고 거시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후보자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 구상을 하고 있고, 본인의 정책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주산업에 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고 거시적인 우주산업 육성 정책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도 이에 따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민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는 항공우주청을 설립할 계획이 있고, 최적의 위치가 경남 지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나사 본사가 워싱턴 DC에 있고 8개의 연구소가 미국 전역에 분산돼 있다. 그 중 휴스턴 기지가 플로리다의 발사체를 통제하는 곳"이라며 "이처럼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연구 기술 개발 역량을 반드시 한 곳에만 모일게 아니라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 집적 할지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굿모닝충청 2022).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설치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자에게 맞불을 놓았고,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고, 연구가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이곳에서 맡는 것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며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한 자리에서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부합하도록 모든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고, 국가우주청은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미국의 나사(NASA)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를 놓았다면, 저는 생태 고속도로 더 나아가서 우주 경제권을 창출하는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강조하면서 "그 첫 주인공은 달에 가는 우리의 청년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각 대선 후보자들별로 우주 산업에 관한 비전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 이러한 사안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우주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우주는 일국의 주권이 적용되기 어려운 국제 공역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 규범이 필요한 공간이다. 후보자는 우주에 적용될 국제 규범을 설립하고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구상하고 있는지?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교육
토론 의제 1	국가교육정책비전과 인재상
토론 의도	각 후보자들의 시대 정신 및 과제에 대한 인식 파악 및 교육관 점검.
토론 질문	Q.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수 및 구성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사람,” “인재”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보께서는 그리는 미래인재상은 무엇이며, 그러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국가교육철학 및 장기적 교육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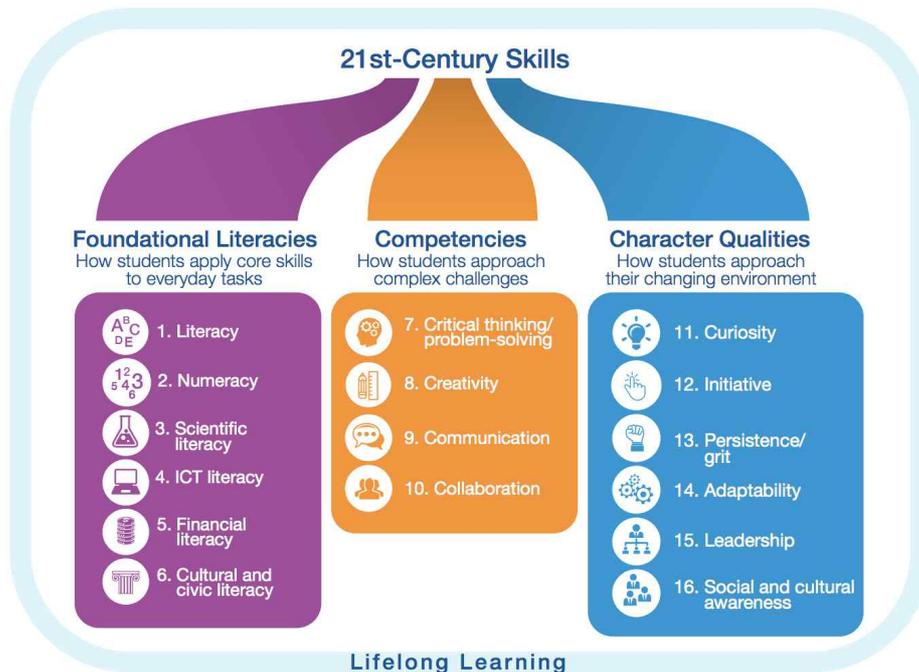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사람이 한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본이 되니, 먼 앞날을 미리 바라보고 세우는 크고도 중요한 계획이 바로 국가의 교육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상투적인 말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삼 경종을 울리는 까닭은 우리나라 교육 기조 및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따라 짧은 주기로 변화하고, 결국 국민들에게는 장기적인 국가 교육 철학 및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이 커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역시 주요 후보들의 교육 정책 공약은 세밀한 제도 개혁, 개선에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국가교육철학이라거나 인재상 제시와 같은 거시적인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롭게 시대에 맞는 인재상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교육 과정의 구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할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추상적이지만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입시제도 공정성 강화와 같은 각론 차원의 제도 개선 및 개혁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교육이 가야할 큰 방향 제시 없이 그때그때의 이슈 대처에 급급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다가올 미래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관 및 인재상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 (WEF)가 2015년에 출판한 “교육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인간 삶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가장 급속한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형 인재는 바로 문해력 (literacy), 수리력 (numeracy), 과학지식 (scientific literacy), 컴퓨터/정보 처리 능력 (ICT literacy), 금융 지식 (finance literacy), 인문 문화 지식 (civic and cultural literacy)와 같은 기본 지식 (foundational literacy)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창의력 (creativity),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on), 협업능력 (collaboration)과 같은 역량 (competency)를 갖춘 사람으로, 그 또는 그녀는 호기심 (curiosity)이 많고 자기주도성 (initiative)이 있으며, 일처리에 있어 문제집착력 (persistence/grit)이 있고, 환경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성 (adaptability)과 리더십 (leadership)이 있으며 높은 사회 문화적 감수성 (social and cultural awareness)을 지닌 사람이다 (동아사이언스, 2020년 11월 3일).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15. “New Vision for Education.” p.3.

우리의 현 공교육체계가 이러한 미래형 국가 인재를 길러내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체제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이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인재의 덕목이었던 근면, 성실, 정직, 그리고 다방면에 두루 어느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갖추면 되었던 제너럴리스트형 인재상에서 디지털 대전환기에 접어들어 창의적, 융합적, 전문적 인재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과연 현 공교육체계가 이러한 인재상의 변화를 촉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전의 산업화시대 표준화된 인재를 길러내는데 적합했던 획일화된 공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이 존중받고 장려되고, 다양한 시도 및 실패가 허용되고 장려되어 제도권 내에서도 학생들이 수만번의 도전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현재까지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정”한 입시 이외에 구체적인 교육철학 및 거시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자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사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시대 정신을 살펴보고, 이에 바탕을 둔 후보자들의 교육철학 및 미래 국가 인재상에 대한 비전을 파악하여 향후 교육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을 타진해 보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각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 각 후보자들의 교육관 및 장기적인 국가교육정책의 비전을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자의 로스쿨 제도 유지와 사법고시의 일부 부활, 윤석열 후보자의 학제개편 및 실용적 교육시스템으로의 개편 언급, 안철수 후보자의 수시 전면 폐지 및 수능 2회 실시, 로스쿨과 고시제도 병행,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교육부 개혁 등의 주로 대입관련 공약이 보이지만, 전반적인 교육관이나 교육철학에 대한 비전 제시는 들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중요한 양대 가치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현 우리의 교육제도는 이 두 가치를 균형있게 구현하도록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다양한 가정 구성의 변화로 인해 학교의 돌봄 기관으로써의 기능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돌봄 공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국가가 학교 등 공교육기관을 통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교육부 폐지/축소”등 교육부 개혁에 대한 논의는 매번 대선마다 반복되는 의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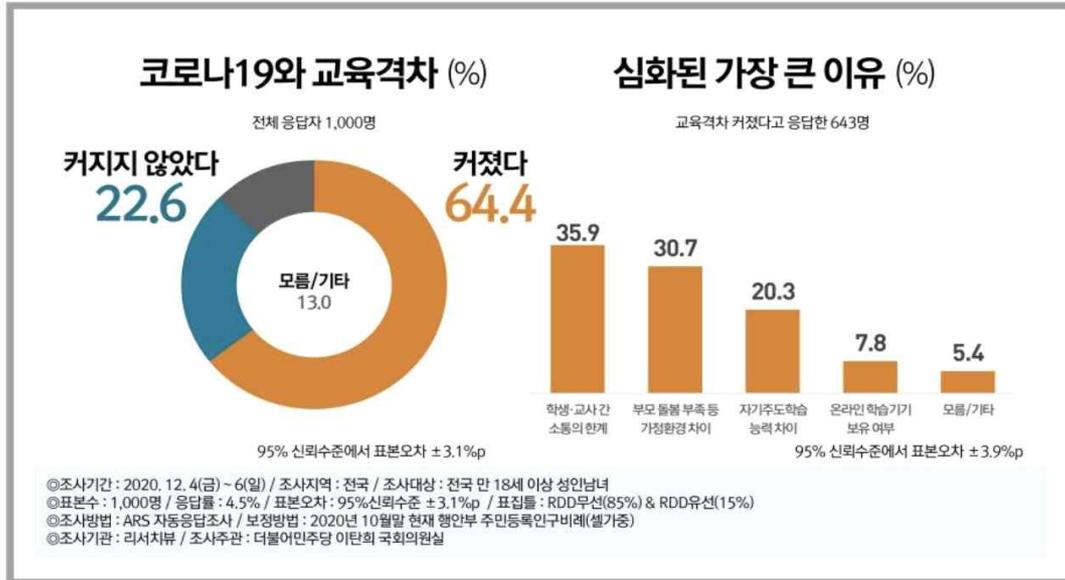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교육
토론 의제 2	디지털 대전환과 교육정책
토론 의도	코로나 19 국면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4차 산업혁명의 교육 현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 점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파악.
토론 질문	Q.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대면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대전환은 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중등 학생들의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후보께서는 디지털 시대 학력 양극화에 완화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교육현장에 어떠한 전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대면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육에 있어서의 디지털 대전환은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도입되었다. 동시에 전통적인 ‘학교’의 의미에 대해서도 기존 인식의 전환과 동시에 그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졌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진보는 팬데믹과 같은 국가 위기 시에도 멈추지 않는 교육을 가능하게 했으나, 경제적, 지역적, 연령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는 곧바로 디지털 디바이드를 낳았고 이는 교육 격차의 심화로 나타났다. 또한 유연하고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선도하는 사교육 시장과 다르게 오히려 공교육에서 인프라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모두 디지털 신기술에 적응이 늦어 전반적인 학력 저하 및 교육 격차의 심화에 기여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아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4%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원격수업을 통한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한계 (35.9%),” 원격수업 시 지원 가능한 “부모의 돌봄 부족 등 가정환경 차이 (30.7%),” 원격수업 기간 동안의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차이 (20.3%),” 그리고 “온라인 학습기기 보유 여부 (7.8%)”를 들었다. 또한

2021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 정도에 대해 묻은 설문조사 결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출처: 조선에듀, “국민 10명 중 6명 코로나로 교육 격차 커져” 2021년 2월 16일.

또한 당면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면수업의 제한으로 인한 단기적 비대면 수업 구성과 진행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넘어서,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의 교육 현장 및 산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은 분명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나들고, 개별 학습자에 맞춤형 교육 제공 등 효율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교육에 있어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강국인 한국으로서는 국제적인 경쟁력 및 선도 위치 유지를 위해 미래 산업 인재 육성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해야 할 과업도 있고, 현재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게는 특히 전통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대면 교육이나 직접 체험 및 경험에 기반을 둔 책,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실험과 같은 전통적인 학습 도구들의 완벽한 대체체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과학 기술에 압도된 교육 정책은 자칫 인문, 사회과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경시를 낳고 오히려 인간, 생명, 환경, 공동체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경시를 낳아 이기주의, 혐오, 배타성,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인간중심의 디지털 기술과 교육과 같은 근본적인 철학적,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중심을 세우고,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선제적인 파악 및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하겠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어 교육정책에 있어 쟁점은 1)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현장의 대변화 그리고 2) 디지털 신기술 관련 산업을 이끌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혁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 개학의 잦은 연기 및 학기 중에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교육 양극화 및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지난 2년간 초중고 시기의 교육 공백 및 학력저하는 해당 세대에게 장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결핍 및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코로나 시기 교육 양극화 및 학력 격차의 해소와 디지털 신기술 활용 및 선도를 위한 교육 정책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교육 현장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및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기술 관련 공통적인 공약은 단연 “범국가적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이다 (아이뉴스 24, 2022년 1월 26일). 이재명 후보는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영역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를 상환받는 제도인 한국식 휴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식 발표 했다.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을 최소 주 1회 이상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소프트웨어와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뉴스 24, 2022년 1월 26일).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나, 정부 중심의 인재양성이 아닌,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나아가 미래의 전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전체를 대전환해야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코딩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이뉴스 24, 2022년 1월 26일).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 등 초중고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정책 결과를 목표에 두고 문제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거나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교육에 있어 디지털 대전환은 고등교육의 의미와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학 간에도 인프라 측면 및 인적 역량 측면에서 디지털 역량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현재 이슈가 되는 학령인구감소 및 지방 인구구조 노령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고등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 ▶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대학교육개혁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가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유도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관료적이고 경직되고 단기 성과 중심일 수 밖에 없는 공적 재원 지원이 무엇보다 자율적이며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호흡이 빠르게 변화해야 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혁신에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교육
토론 의제 3	대입제도개선: 공정한 평가 그 이상을 향하여
토론 의도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해결책 제시 파악.
토론 질문	Q. 최근 수년간 사회 엘리트층의 입시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대입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우리사회 불평등 문제 해소와 연관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동시에 대학입학제도는 초중고공교육과정 수립과 운영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같이 국가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이란 측면에서 현재의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는 평가의 공정성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정책 목표를 위해 논의가 발전되고 성숙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안은 무엇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등 사회 지도층 자녀의 잇따른 입시 비리로 인해 대입전형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및 전 과목 절대평가제의 전면 시행에 맞추어 미래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2024년에 새로운 제도의 공개를 통해 2028학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2021년 1월 28일). 대학 관계자와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대입제도는 “1) 저하된 학종 신뢰성 및 공정성, 2) 복잡하고 어려운 전형, 3) 적은 재도전 기회, 4) 고교교육 정상화 저해, 5) 미래인재 양성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2018년 4월 6일). 빈번하게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학, 고교, 학부모, 학생 등과 같은 당사자들의 피로감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사회, 경제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여겨지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및 청년들의 취업 문제, 다양한 학생의 선발을 통한 고등교육의 자율성 문제, 나아가 국가 성장을 위한 미래형 인재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2년 1월 24일 현재 대입제도와 관련한 주요 후보자들의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공정”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각 후보자는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공정”이라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묻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강화된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전형 기조 하에 크게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과 관련된 빈번한 입시 비리, 사회적 스캔들이 있을 때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개선해온 복잡한 제도, 교육부의 탐다운식 입시제도의 수립과 교육 현장의 수요와의 불일치 등 여전히 여러 가지 부작용 및 한계가 있다. 결과는 사교육 시장의 비대한 확장과 과도한 사교육 의존에 따른 사회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입시에 있어서의 불공정, 불평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대입제도 문제점에 대한 현실 인식을 파악하고 그 개선과 관련한 입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공정”이 후보자들 공약의 공통분모이지만 각자의 후보자들이 바라보는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의 결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학생부종합전형에 바탕을 둔 수시 평가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과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의 두가지 쟁점으로 후보들의 공약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빈번하게 바뀌는 대입제도는 불확실성,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정보의 비대칭성 등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사회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도입된 데에는 분명히 고교 교육의 정상화, 학생 평가의 다양성 등 수능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입시비리 사건 중심의 논의만이 보인다. 따라서 정시와 수시의 균형 및 운영에 있어서의 섬세함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각 후보들의 비판적 시각 및 대안 제시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비리의 모니터링 및 처벌 메커니즘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수시 입시 부정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도 공약했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학저널, 2022년 1월 24일).

윤석열 후보의 대입제도 관련 공약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에 대처하면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정시 비중 확대”이다 (대학저널, 2022년 1월 24일).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입시제도 정착을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불공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원스크라이트 아웃제’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저널, 2022년 1월 24일).

안철수 후보의 관련 공약은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해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정시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내신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입학, 졸업 취소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해당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대입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학저널, 2022년 1월 24일).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학령인구감소 및 4차산업혁명과 같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향후 대학의 위상 및 존재에 대한 도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대학들은 벌써 그 여파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후보님께서 이러한 우리사회의 인구 구조적 변화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변화를 계획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 대학입시는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각 대학의 특성 및 지향하는 인재상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 측면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문화
토론 의제 4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토론 의도	차별과 혐오 관련 사회 현황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교육, 인식 개선 및 법제화 등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점검
토론 질문	Q.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아졌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 기저에 존재하던 차별과 혐오의 문제점을 강화하고 부각시켰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로 인한 실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어디까지 생각이 모아졌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후보자만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지난 2021년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1만 7593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5%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36.3%가 좋아지고 있으며 9.3%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전반적으로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47.4%로 2020년 조사 보다 13.7%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연령,’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경험이 높았으나, 2021년에는 ‘성별 (7.6%),’ ‘연령 (7.5%),’ ‘경제적 지위 (6.2%)’로 인한 차별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2021). 이 외에도 “차별과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 (35.6%), 장애인 (32.9%)과 이주민 (22.3%)” 순으로 꼽혔다 (조선일보 2021년 12월 21일 기사).

관련해서 동 실태조사는 2020년에 비해 1.4% 포인트 상승한 54.8%의 응답자가 2021년도에 혐오표현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TV, 라디오 등 미디어와 온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정치인 (39.7%), 여성 (32.1%), 성소수자 (28.5%)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21년 12월 21일 기사).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혐오범죄가

증가한 가운데,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 정보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은 혐오범죄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인식이 42.59%으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갈등의 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특히 경제적 빈곤층,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에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인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한겨레 신문의 2021년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가 법적 규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궐립에 의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2020).

이에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021년 6월 법 제정 국민청원동의가 10만명을 넘겼으나 (한국일보 2021년 12월 16일 기사), 2022년 1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중요한 인권 이슈 쟁점으로 ‘차별과 혐오’가 거론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의 점검과 향후 임기 내 적극적인 제도적 법적 대응책 마련은 우리 사회가 보다 다양하면서도 조화롭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마련된 공동체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현안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차별과 혐오’가 조장되는 사회는 바로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안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 토론을 통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에 대한 주요 논점은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과 같은 법제화에 관련된 논의이다.

공식열 법제화를 통한 차별과 혐오에 대처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적극 입법 공약을 낸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2021년 11월 “8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차별금지법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가, [12월]

10일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16일에는 성적 지향,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제외한 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선대위가 검토한다고 보도됐다” (한국일보, 2021년 12월 16일 기사).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대에서 ‘차별금지법이 개별 사안마다 형량 결정이 안 돼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12월] 14일 관훈토론회에서는 ‘선진국도 포괄적 기준으로 차별을 방지하지 않는다’며 ‘법을 강제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또한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차별 금지 사유와 영역의 구체적인 적시 또는 포괄적 법제화 등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 온라인 및 방송 매체에서 ‘혐오표현’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및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 및 혐오’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이민자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우리사회의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비전 및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교육/문화 분야	
세부 분야	문화
토론 의제 5	문화예술분야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 의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이후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취약층 지원 방안 및 한국의 미래 산업 구조에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구체적인 문화산업정책 비전 파악
토론 질문	Q. 지난 2년간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건강한 문화예술산업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문화예술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1. 의제 선정 이유 및 배경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문화예술계는 점차 회복의 조짐을 보인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 비해 2021년 공연 “매출액은 75.6%, 관객수는 67.9%, 공연건수는 1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2021년 12월 31일). “공연건수나 관객수는 아직 팬데믹 이전에 비해 축소된 상황이지만 매출액만큼은 [2019년 하반기의 1837억 원에서 2020년 하반기의 735억 원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184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2021년 12월 31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문화예술계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고, 더욱 영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간 코로나 19 팬데믹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예술인들, 특히 지방 및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있어 현재 전세계적인 K-문화의 영향력 및 이로 인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과 같은 간접적인 성과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문화예술계의 육성 및 발전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 산업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래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 자체가 이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컴퓨터 다음의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수출액만으로 봤을 때는 5년 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수출 효자된 콘텐츠 산업 (단위: 억 달러)



매년 증가하는 국내 콘텐츠 수출액



- 출처: 한국일보. “<신년기획> 콘텐츠 강소국에서 강대국으로: ‘오겜’은 일부... 가전보다 해외서 더 잘 팔리는 K콘텐츠.” 2022년 1월 3일.

향후 오미크론의 추이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 코로나 19 팬데믹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문화예술계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비전을 확인하고 각 후보자의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국가 간 문화 교류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가져올 대전환의 시대에 문화 산업 수립에 있어 정부의 역할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토론 논점 및 쟁점

문화예술분야의 토론 쟁점은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초 문화예술 창작 노력을 위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 및 보호 정책 수립과 2) 향후 미래 산업으로써 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의 핵심은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 19 방역 정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 예산을 현재 보다 2배 이상 높은 2.5%까지 늘”리고,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한겨레 신문, 2022년 1월 20일). 또

한 “K-콘텐츠 벨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 기업을 만들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SBS NEWS, 2022년 1월 20일).

윤석열 후보는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공약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1년 12월 간담회에서 “문화라는 영역에서도 ‘복지’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문화 수요를 먼저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동아일보, 2021년 12월 8일).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정책 분야 등에서 지원은 하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 기조를 강조했다” (노컷뉴스, 2022년 1월 31일).

심상정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펜데믹 같은 재난 상황 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예술인들의 노동조건 개선, 독립영화, 인디뮤직, 기초예술 분야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컷뉴스, 2022년 1월 31일).

3. 관련 의제 및 추가 질문

- ▶ 지역간 문화 격차, 특히 서울에 집중된 문화예술산업 완화 또는 지역 문화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 e스포츠에 대한 정책이 이번 대선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을 전면
에 내고 있는 분야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에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규제정책에 기울어져 있었던 편입니다. 각 후보들의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각 후보의 e스포츠 육성 및 지원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무대로 진출함에 있어서 국제 통상 규범 또는 관행 그리고 험한 기류 등 고충이 있다면 무엇이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V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구 분	분야	성 명	소 속
참여연구진	정치	김남규	고려대학교
		이선우	전북대학교
	외교	권재범	한국의국어대학교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경제	이재묵	한국의국어대학교
		김성조	순천대학교
	사회	김한나	서울대학교
		홍미화	국민대학교
전문가 자문단	경제	어윤종	고려대학교
		이강구	KDI
		이나경	서울여자대학교
	사회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김윤영	전북대학교
		정인관	송실대학교